2026. 11.

국회예산정책처 I 인구·고용동향 & 이슈 I 제8호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CONTENTS

인구 동향
고용 동향
지속가능 성장
기술 동향
이슈 분석 | 혼인과 출생의 동반 반등: 관계와 지속 가능성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총괄	정 지 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한 승 룡	경제분석관
작성	한 승 룡	경제분석관
	김 상 용	경제분석관
	천 경 록	경제분석관
	홍 지 은	경제분석관
	백 기 홍	경제분석관
지원	성 혜 정	행정실무관
	강 태 용	자료분석연구원

- 「**NABO 인구 · 고용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02-6788-474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인구 · 고용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Contents

Ⅰ 인구 동향

1. 인구 9
2. 출생·사망·자연증감·인구이동 13
   [Box 1] 2025년 사망원인통계 21
3. 가족 27

Ⅱ 고용 동향

1. 고용량 33
2. 노동력 수급여건 41
   [Box 2] OECD 국가의 국제이동과 이민자 고용 동향 46
3. 임금 및 가구 소득 47

Ⅲ 지속가능 성장

1. 양질의 교육 보장 53
   [Box 3] UNESCO「세계교육현황보고서 2026」 57
2. 성평등 58
3. 평화·정의·포용적인 제도 61
4. 글로벌 파트너십 64

Ⅳ 기술 동향

자율주행 기술과 한국의 고용시장 69

Ⅴ 이슈 분석

혼인과 출생의 동반 반등: 관계와 지속 가능성 85

2026년 11월호 **통권 제8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동향 종합

최근 출생 증가로 자연감소폭은 감소하였으나, 내국인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지속되고,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에도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의 부진이 지속

인구

- 10월 「주민등록인구」는 5,10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10월 「유소년 인구」, 「생산연령 인구」, 「고령 인구」 비율은 각각 10.0%, 67.8%, 22.2%
- 9월 「이동자 수」는 44.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명 감소
- 8월 「출생아 수」는 2.4만명이며 2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사망자 수」는 3.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만명 증가
- 8월 「혼인 건수」는 1.9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24건 감소

고용

- 10월 「취업자 수」는 13.9만명 증가한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 지속
  - 보건·사회복지업(+24.9만), 운수·창고업(+4.8만) 등에서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13.7만), 건설업(-4.2만) 등에서 감소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0.1%p 하락한 가운데 20대 남녀는 각각 1.7%p, 1.6%p의 큰 폭으로 하락
- 10월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단, 청년 「확장실업률」은 15.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9월 「채용」은 건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4만명 증가
  - 「빈일자리율」은 0.8%로 전년동월대비 0.06%p 상승
- 8월 「임금」은 정액·초과·특별급여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지속가능 성장

- 인적자원 및 제도 부문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치안 수준이 국제적으로 양호하고 여성의 공직 진출도 확대되었으나, 학업성취도 하락과 성인 교육·훈련 참여 저조, 성별 돌봄 부담 격차 및 개발원조 국제목표 미달 등은 과제로 남아 있음
  - (SDG4 양질의 교육 보장) 학생의 읽기·수학 최소숙달수준 도달률은 OECD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이전 조사 대비 하락하였으며, 평생학습 참여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SDG5 성평등) 여성의 정치·행정 분야 참여가 확대되고 가사·돌봄노동의 성별 격차도 축소되었으나, 주요국 대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고 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도 지속
  - (SDG16 평화·정의·포용적인 제도) 고의살인 피해자 수는 감소하여 OECD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을 하회
  - (SDG17 글로벌 파트너십)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은 2025년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체 및 최저개발국 대상 원조 모두 국제목표에 미달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주요 인구·고용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감, 만명, 만세대)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Q	1Q	2Q	7월	8월	9월	10월
주민등록인구	-10.8 (-0.21)	-10.0 (-0.19)	-10.0 (-0.19)	-8.2 (-0.16)	-7.3 (-0.14)	-7.2 (-0.14)	-7.1 (-0.14)	-6.7 (-0.13)	-6.8 (-0.13)
주민등록세대 수	20.4 (0.85)	18.1 (0.75)	18.1 (0.75)	20.1 (0.83)	23.3 (0.96)	23.6 (0.97)	23.9 (0.98)	23.1 (0.95)	23.4 (0.96)
출생아 수	0.8 (3.6)	1.6 (6.7)	0.3 (5.0)	1.0 (14.9)	1.0 (15.8)	0.2 (11.1)	0.3 (13.0)		
사망자 수	0.6 (1.7)	0.4 (1.2)	0.1 (1.1)	-0.8 (-7.5)	0.1 (1.4)	0.1 (3.0)	0.1 (4.9)		
혼인 건수	2.9 (14.8)	1.8 (8.1)	0.3 (5.8)	0.4 (6.1)	0.3 (4.9)	0.2 (9.3)	-0.0 (-1.2)		
이동자 수	15.5 (2.5)	-16.6 (-2.6)	-11.3 (-7.5)	4.0 (2.3)	2.6 (1.8)	-8.6 (-15.5)	-2.2 (-4.5)	-5.0 (-10.1)	
취업자 수	15.9 (0.6)	19.3 (0.7)	19.5 (0.7)	18.3 (0.6)	3.2 (0.1)	10.8 (0.4)	18.4 (0.6)	11.3 (0.4)	13.9 (0.5)
월평균 채용	-3.1	-9.1	-10.2	6.2	12.3	16.8	14.4	10.4	
경제활동참가율 (%)	64.5	64.7	64.6	64.1	65.1	65.0	64.6	64.8	64.6
실업률(%)	2.8	2.8	2.9	3.5	2.9	2.6	2.0	2.0	2.0
빈일자리율(%)	1.0	0.8	0.7	0.7	0.8	0.8	0.8	0.8	
명목임금 상승률(%)	2.9	3.1	4.7	3.4	2.1	2.5	3.9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Ⅰ 인구 동향

요약

10월 주민등록인구는 5,108만명이며, 전년동월대비 6.8만명(-0.1%) 감소

- 주민등록인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10월)-11.6(-0.2)→('25.10월)-9.5(-0.2)→('26.10월)-6.8(-0.1)

10월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10.0%, 67.8%, 22.2%

- 유소년인구 비율(%): ('24.10월)10.7→('25.10월)10.3→('26.10월)10.0
- 생산연령인구 비율(%): ('24.10월)69.5→('25.10월)68.6→('26.10월)67.8
- 고령인구 비율(%): ('24.10월)19.8→('25.10월)21.0→('26.10월)22.2

9월 이동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등락은 일정 범위 안에서 지속

- 이동자 수(천 명): ('24.9월)463→('25.9월)494→('26.9월)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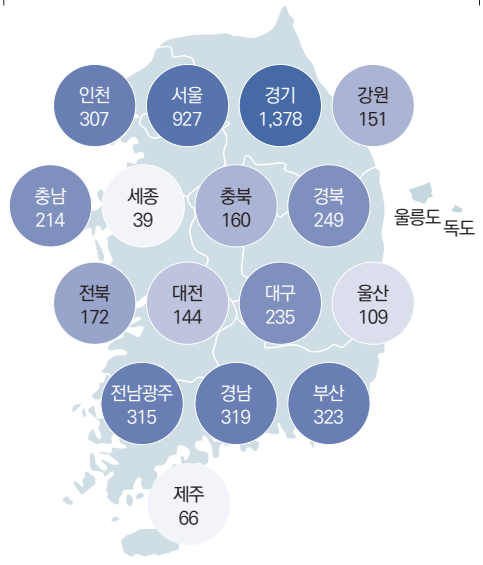
8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82개월째 하회하여 인구의 자연감소 지속

- 출생아 수(천명): ('24.8월)20.1→('25.8월)21.0→('26.8월)23.7
- 사망자 수(천명): ('24.8월)32.1→('25.8월)28.9→('26.8월)30.3
- 인구의 자연증감(천명): ('24.8월)-12.0→('25.8월)-7.9→('26.8월)-6.6

8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여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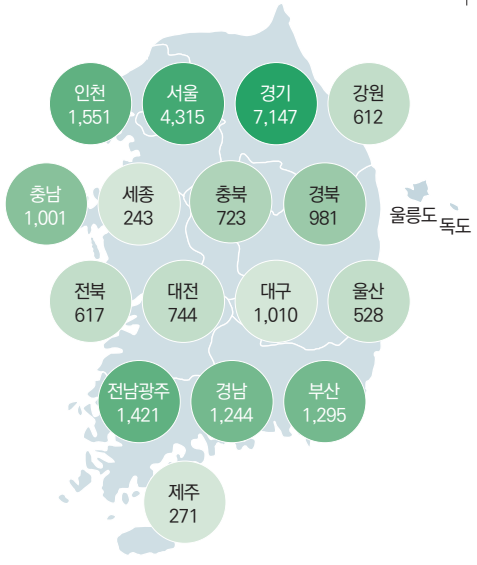
- 혼인 건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건): ('24.8월)2.9→('25.8월)1.9→('26.8월)-0.2

주민등록인구(2026.10.) (만 명)
전국: 5,108만 명



자료: 행정안전부

출생아수(2026.8.) (명)
전국: 23,703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요 용어

인구

- **총인구:** 11월 1일 0시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의 총합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포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은 제외. 총인구는 매년 작성 기준년 다음 해 7월에 공표
-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를 집계하여 작성한 인구수로 외국에 유학이나 취업으로 출국한 내국인을 포함

인구 구조

-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유소년인구는 0~14세 인구,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 인구,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

출생·사망·혼인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출생률:** 1년간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
- **조출생률·조사망률·조혼인율·조이혼율:**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사망자 수·혼인 건수·이혼 건수
- **인구 자연증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치
- **기대여명:**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0세 출생아의 기대여명이 기대수명

인구이동

- **이동자 수:** 대한민국 국민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전입신고서에 근거해 집계한 수치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전입, 특정 지역에서 나가면 전출로 구분. 시도 단위로 볼 때는 시도 경계를 넘는 시도간이동과 같은 시도 안에서 읍면동 경계를 넘는 시도내이동으로 나뉨.
- **순이동:**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으면 순유입, 전출이 전입보다 많으면 순유출을 의미. 지역별로는 유입·유출 방향이 다르지만 전국 단위로 합산하면 서로 상쇄되어 순이동은 0이 됨

가족 · 가구

- **총가구:** 총가구는 11월 1일 0시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의 총합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 구성되어 있는 가구도 포함
- **가구와 세대:**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세대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주민등록편람). 가구와 세대의 개념적 차이는 없으나, 주민등록세대에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Ⅰ 인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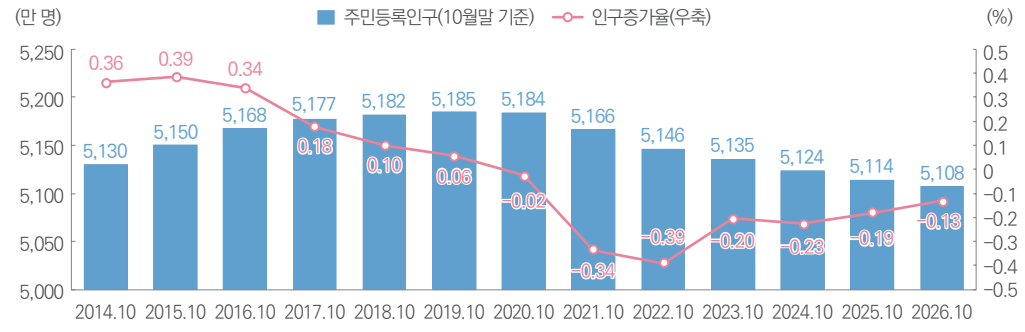
CHAPTER
01 인구

가. 주민등록인구

10월 주민등록인구는 5,108만명이며, 전년동월대비 6.8만명(-0.1%) 감소

- 10월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이후 6년 연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다소 낮아짐
  - 주민등록인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10월)-11.6(-0.23)→('25.10월)-9.5(-0.19)→('26.10월)-6.8(-0.13)

그림 1 |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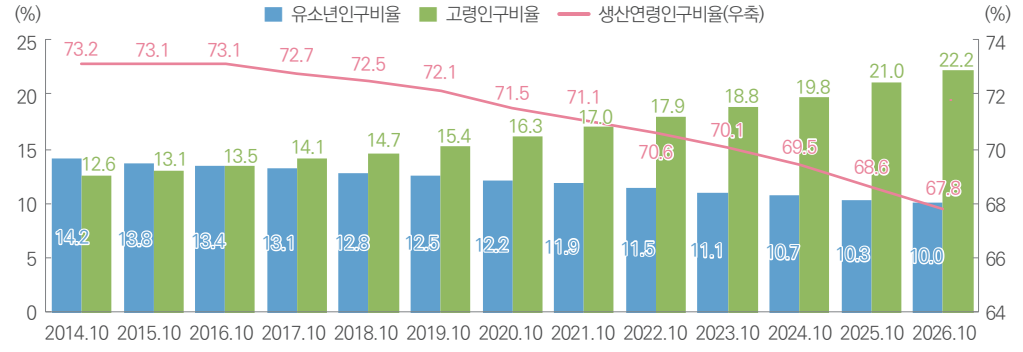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10월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비율은 각각 10.0%, 67.8%, 22.2%

- 유소년인구 비율은 10.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유소년인구 비율(%): ('24.10월)10.7→('25.10월)10.3→('26.10월)10.0
-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67.8%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 생산연령인구 비율(%): ('24.10월)69.5→('25.10월)68.6→('26.10월)67.8
- 고령 인구 비율은 22.2%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고령인구 비율(%): ('24.10월)19.8→('25.10월)21.0→('26.10월)22.2

그림 2 |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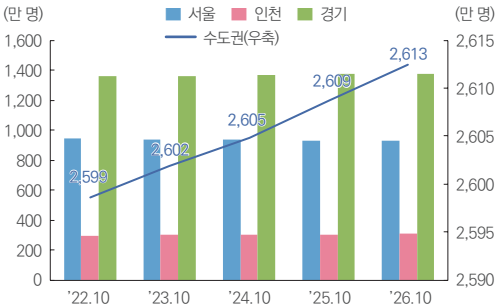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 단위로는 수도권, 충청권 인구는 증가 추세이며, 그 밖의 지역은 인구 감소 추세

- 서울 인구는 감소하지만, 인천과 경기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1] 인구는 2,61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5% 증가
  - 수도권 인구(만명): ('24.10월)2,605→('25.10월)2,609→('26.10월)2,613
  - 서울 인구(만명): ('24.10월)934→('25.10월)931→('26.10월)927
  - 인천 인구(만명): ('24.10월)302→('25.10월)305→('26.10월)307
  - 경기 인구(만명): ('24.10월)1,369→('25.10월)1,372→('26.10월)1,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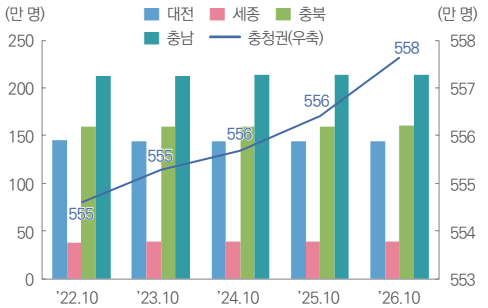
- 충청권[2] 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5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2% 증가
  - 충청권 인구(만명): ('24.10월)556→('25.10월)556→('26.10월)558
  - 대전 인구(만명): ('24.10월)144→('25.10월)144→('26.10월)144
  - 세종 인구(만명): ('24.10월)39→('25.10월)39→('26.10월)39
  - 충북 인구(만명): ('24.10월)159→('25.10월)159→('26.10월)160
  - 충남 인구(만명): ('24.10월)214→('25.10월)214→('26.10월)214

그림 3 | 수도권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4 | 충청권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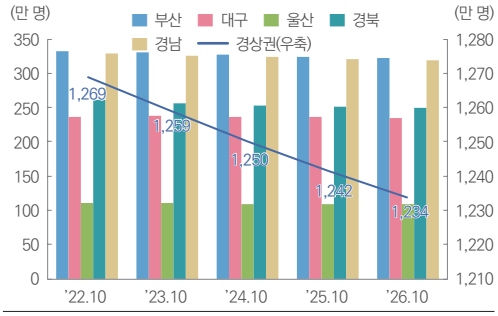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1]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구성

[2]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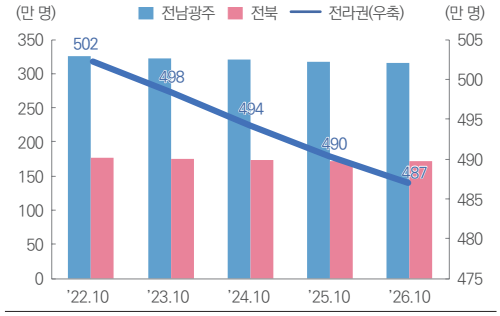
- 경상권[3]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여 1,23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4% 감소
  - 경상권 인구(만명): ('24.10월)1,250→('25.10월)1,242→('26.10월)1,234
  - 부산 인구(만명): ('24.10월)327→('25.10월)325→('26.10월)323
  - 대구 인구(만명): ('24.10월)236→('25.10월)236→('26.10월)235
  - 울산 인구(만명): ('24.10월)110→('25.10월)109→('26.10월)109
  - 경북 인구(만명): ('24.10월)254→('25.10월)251→('26.10월)249
  - 경남 인구(만명): ('24.10월)323→('25.10월)321→('26.10월)319
- 전라권[4]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여 48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70% 감소
  - 전라권 인구(만명): ('24.10월)494→('25.10월)490→('26.10월)487
  - 전남광주 인구(만명): ('24.10월)320→('25.10월)318→('26.10월)315
  - 전북 인구(만명): ('24.10월)174→('25.10월)173→('26.10월)172
- 강원도와 제주도의 인구는 감소 추세로 각각 151만명, 66만명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16%, 0.47% 감소
  - 강원 인구(만명): ('24.10월)152→('25.10월)151→('26.10월)151
  - 제주 인구(만명): ('24.10월)67→('25.10월)67→('26.10월)66

그림 5 | 경상권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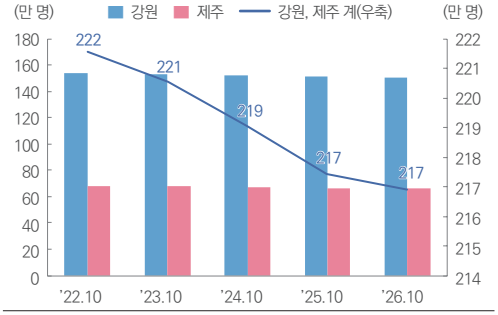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6 | 전라권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7 | 강원도, 제주도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3] 경상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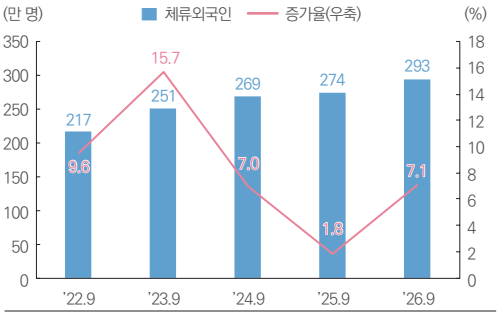
[4] 전라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

나. 체류외국인

➲ 9월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9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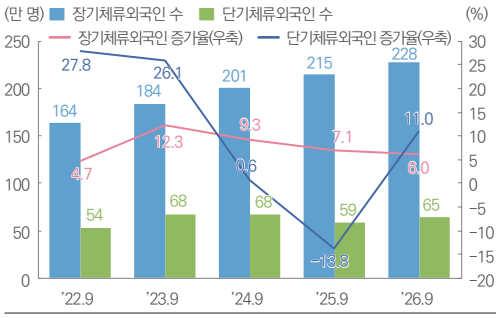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은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 체류외국인 수(만명): ('24.9월)269→('25.9월)274→('26.9월)293
  - 체류외국인 증가율(%): ('24.9월)7.0→('25.9월)1.8→('26.9월)7.1
  - 장기체류 외국인 수(만명): ('24.9월)201→('25.9월)215→('26.9월)228
  - 단기체류 외국인 수(만명): ('24.9월)68→('25.9월)59→('26.9월)65

그림 8 | 체류외국인 수 및 증가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그림 9 |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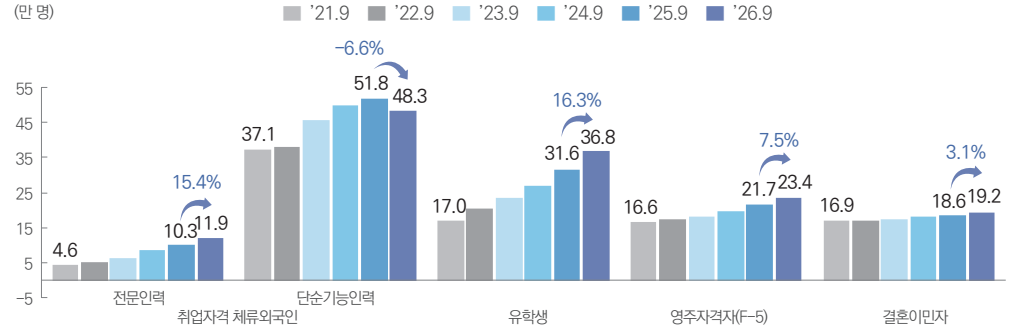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 체류자격별로 전문인력 외국인과 유학생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 기록

- 9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 중 체류자격별로 전문인력 취업자격 외국인은 전년동월대비 15.4% 증가, 단순기능 취업자격외국인은 6.6% 감소했으며, 유학생은 16.3%, 영주권자는 7.5%, 결혼이민자는 3.1% 증가
  - 취업자격외국인은 60만명이며, 유학생은 37만명, 영주자격자 23만명, 결혼이민자 19만명 순

그림 10 | 체류 자격별 현황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CHAPTER
02 출생·사망·자연증감·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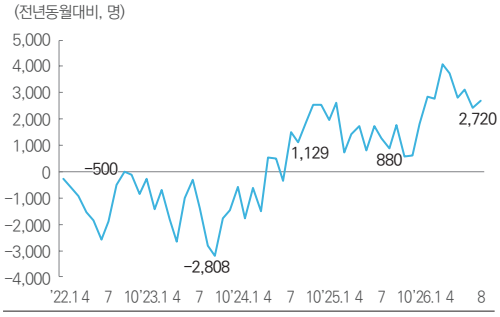
가. 출생

➲ 8월 출생아 수는 2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유지

- 8월 출생아 수는 23,70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20명(13.0%) 증가
  -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24.8월)1.1→('25.8월)0.9→('26.8월)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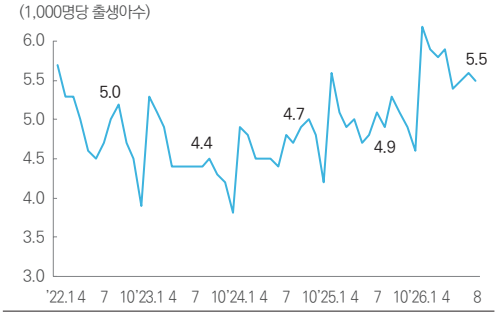
- 8월 조출생률은 5.5명으로 8월 기준으로는 2019년(5.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년동월대비 0.6명 증가
  - 조출생률(명): ('24.8월)4.7→('25.8월)4.9→('26.8월)5.5

그림 11 | 출생아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2 | 조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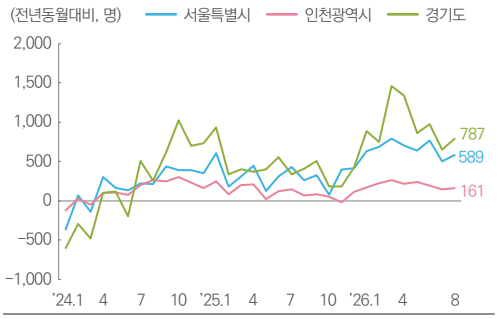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지역 단위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수도권 지역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크며 출생아 수 13,01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
  - 서울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13→('25.8월)259→('26.8월)589
  - 인천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72→('25.8월)65→('26.8월)161
  - 경기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58→('25.8월)405→('26.8월)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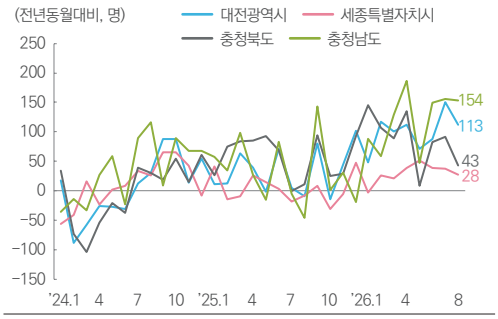
- 충청권은 지역별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 증가 추세이며, 출생아 수 2,71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
  - 대전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30→('25.8월)-10→('26.8월)113
  - 세종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7→('25.8월)-8→('26.8월)28
  - 충북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30→('25.8월)11→('26.8월)43
  - 충남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16→('25.8월)-47→('26.8월)154

그림 13 | 수도권 출생아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4 | 충청권 출생아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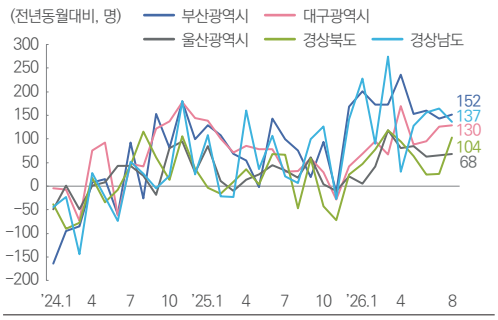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경상권 또한 지역별 등락 속 전반적 증가 추세로, 출생아 수 5,05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
  - 부산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6→('25.8월)75→('26.8월)152
  - 대구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42→('25.8월)32→('26.8월)130
  - 울산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2→('25.8월)18→('26.8월)68
  - 경북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16→('25.8월)-47→('26.8월)104
  - 경남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6→('25.8월)6→('26.8월)137

- 전라권은 출생아 수 2,03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 증가
  - 전남광주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87→('25.8월)61→('26.8월)139
  - 전북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9→('25.8월)13→('26.8월)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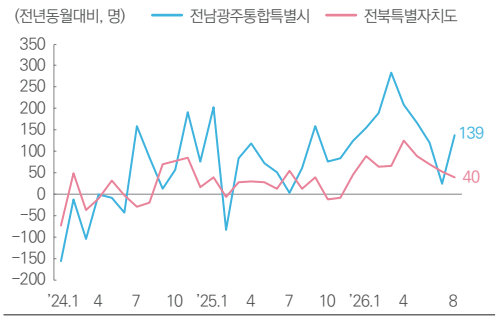
- 강원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제주는 증가폭이 줄어들어, 출생아 수 각각 612명(+11.9%), 271명(+3.8%)
  - 강원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33→('25.8월)26→('26.8월)65
  - 제주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32→('25.8월)21→('26.8월)10

그림 15 | 경상권 출생아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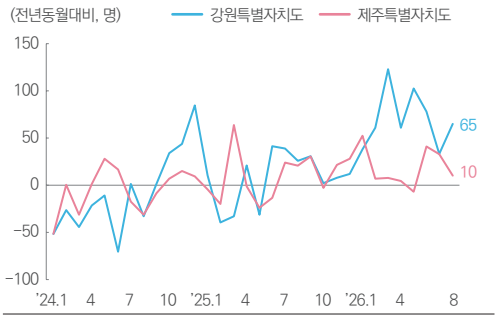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6 | 전라권 출생아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7 | 강원도, 제주도 출생아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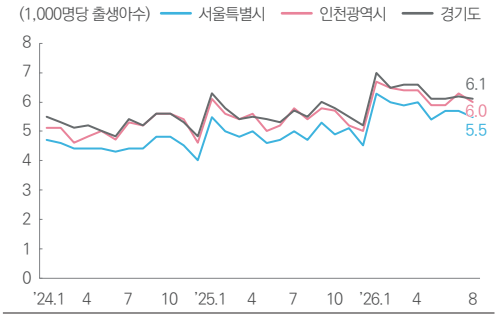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조출생률은 모든 지역에서 상승 추세이며, 세종이 전 기간 가장 높은 수준 유지

- 수도권은 세 지역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보임
  - 서울 조출생률(명): ('24.8월)4.4→('25.8월)4.7→('26.8월)5.5
  - 인천 조출생률(명): ('24.8월)5.2→('25.8월)5.4→('26.8월)6.0
  - 경기 조출생률(명): ('24.8월)5.2→('25.8월)5.5→('26.8월)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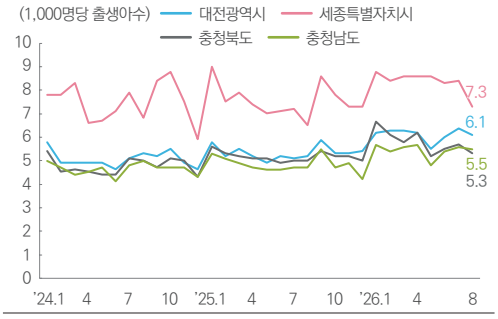
- 충청권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감
  - 대전 조출생률(명): ('24.8월)5.3→('25.8월)5.2→('26.8월)6.1
  - 세종 조출생률(명): ('24.8월)6.8→('25.8월)6.5→('26.8월)7.3
  - 충북 조출생률(명): ('24.8월)5.0→('25.8월)5.0→('26.8월)5.3
  - 충남 조출생률(명): ('24.8월)5.0→('25.8월)4.7→('26.8월)5.5

그림 18 | 수도권 조출생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9 | 충청권 조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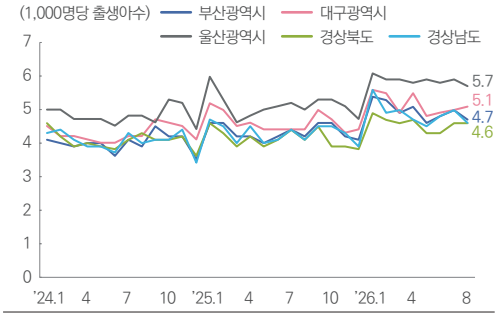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경상권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 추세
  - 부산 조출생률(명): ('24.8월)3.9→('25.8월)4.2→('26.8월)4.7
  - 대구 조출생률(명): ('24.8월)4.2→('25.8월)4.4→('26.8월)5.1
  - 울산 조출생률(명): ('24.8월)4.8→('25.8월)5.0→('26.8월)5.7
  - 경북 조출생률(명): ('24.8월)4.3→('25.8월)4.1→('26.8월)4.6
  - 경남 조출생률(명): ('24.8월)4.0→('25.8월)4.1→('26.8월)4.6

• 전라권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상승 폭이 확대
  - 전남광주 조출생률(명): ('24.8월)4.5→('25.8월)4.8→('26.8월)5.3
  - 전북 조출생률(명): ('24.8월)3.8→('25.8월)3.9→('26.8월)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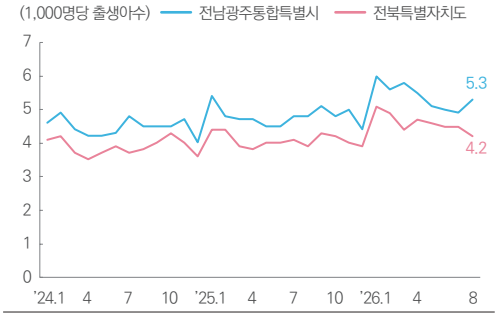
• 강원과 제주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강원의 상승폭이 더 큼
  - 강원 조출생률(명): ('24.8월)4.1→('25.8월)4.3→('26.8월)4.8
  - 제주 조출생률(명): ('24.8월)4.2→('25.8월)4.6→('26.8월)4.8

그림 20 | 경상권 조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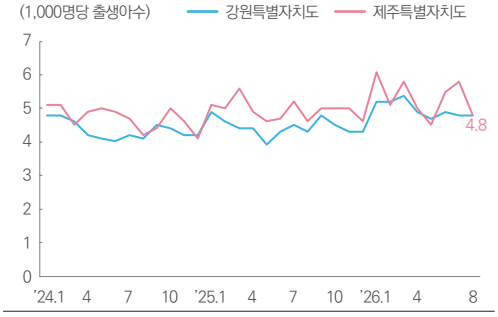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1 | 전라권 조출생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2 | 강원도, 제주도 조출생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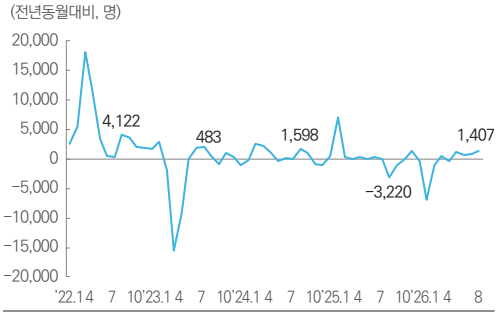
나. 사망

8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사망자 수는 30,30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07명(4.9%) 증가
  -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24.8월)1.6→('25.8월)-3.2→('26.8월)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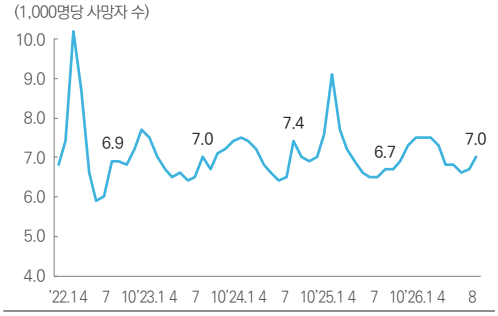
- 8월 조사망률은 7.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명 증가
  - 조사망률(명): ('24.8월)7.4→('25.8월)6.7→('26.8월)7.0

그림 23 | 사망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4 | 조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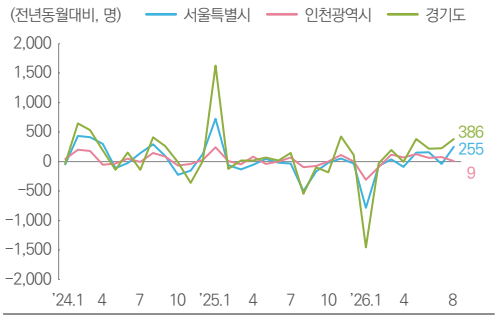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지역단위 사망자 수는 모든 권역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와 증가 인원은 수도권이 가장 많았음

- 수도권은 사망자 수 12,63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하며 권역 중 증가 인원이 가장 많았음
  - 서울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300→('25.8월)-507→('26.8월)255
  - 인천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55→('25.8월)-95→('26.8월)9
  - 경기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410→('25.8월)-552→('26.8월)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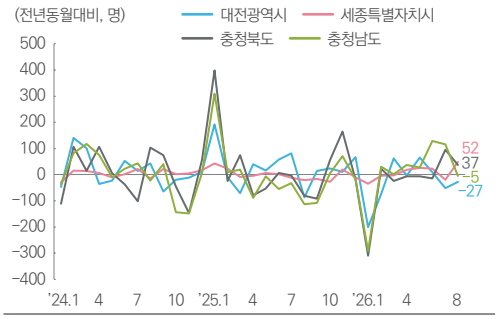
- 충청권은 사망자 수 3,511명으로 2025년 감소 후 전년동월대비 1.7% 소폭 증가
  - 대전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43→('25.8월)-88→('26.8월)-27
  - 세종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6→('25.8월)-22→('26.8월)52
  - 충북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04→('25.8월)-82→('26.8월)37
  - 충남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3→('25.8월)-114→('26.8월)-5

그림 25 | 수도권 사망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6 | 충청권 사망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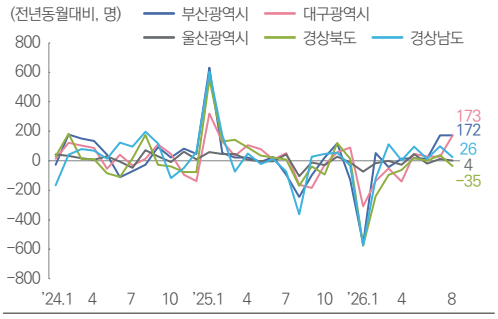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경상권은 사망자 수 8,68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며 완만한 증가세**
  - 부산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6→('25.8월)-246→('26.8월)172
  - 대구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3→('25.8월)-165→('26.8월)173
  - 울산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76→('25.8월)-109→('26.8월)4
  - 경북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76→('25.8월)-170→('26.8월)-35
  - 경남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97→('25.8월)-364→('26.8월)26

- **전라권은 사망자 수 3,85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증가**
  - 전남광주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27→('25.8월)-339→('26.8월)148
  - 전북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24→('25.8월)-217→('26.8월)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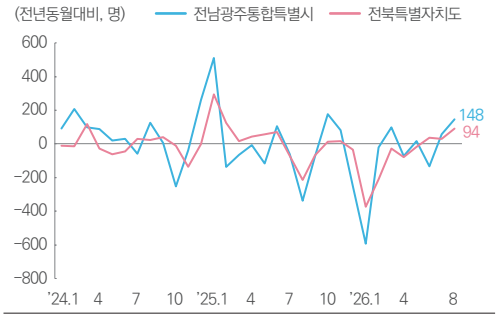
- **강원과 제주는 각각 사망자 수 1,209명, 415명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7.1%, 9.8% 증가하였으며 2025년 감소 후 증가로 전환**
  - 강원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57→('25.8월)-120→('26.8월)80
  - 제주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8월)-19→('25.8월)-30→('26.8월)37

그림 27 | 경상권 사망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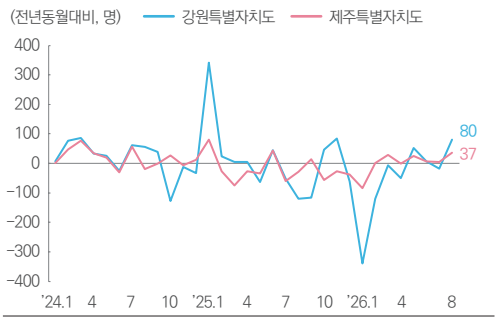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8 | 전라권 사망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9 | 강원도, 제주도 사망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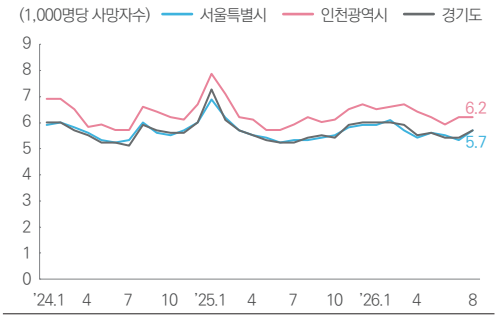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조사망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2025년 하락 후 반등했으나 2024년 수준을 밑돌며, 경북이 대체로 높고 세종이 가장 낮은 수준 유지

- 수도권은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 추세이며, 인천이 가장 높고 서울·경기가 뒤를 이음
  - 서울 조사망률(명): ('24.8월)6.0→('25.8월)5.3→('26.8월)5.7
  - 인천 조사망률(명): ('24.8월)6.6→('25.8월)6.2→('26.8월)6.2
  - 경기 조사망률(명): ('24.8월)5.9→('25.8월)5.4→('26.8월)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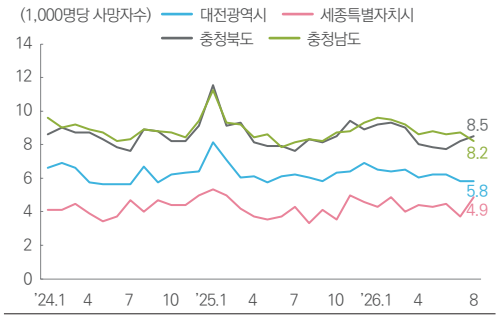
- 충청권은 세종이 반등한 반면 대전은 하락세
  - 대전 조사망률(명): ('24.8월)6.7→('25.8월)6.0→('26.8월)5.8
  - 세종 조사망률(명): ('24.8월)4.0→('25.8월)3.3→('26.8월)4.9
  - 충북 조사망률(명): ('24.8월)8.9→('25.8월)8.3→('26.8월)8.5
  - 충남 조사망률(명): ('24.8월)8.9→('25.8월)8.3→('26.8월)8.2

그림 30 | 수도권 조사망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31 | 충청권 조사망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경상권은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2025년 하락 후 대체로 소폭 반등했으며, 경북이 가장 높고 울산이 가장 낮음

- 부산 조사망률(명): ('24.8월)8.8→('25.8월)8.0→('26.8월)8.6
- 대구 조사망률(명): ('24.8월)7.5→('25.8월)6.7→('26.8월)7.6
- 울산 조사망률(명): ('24.8월)6.8→('25.8월)5.6→('26.8월)5.7
- 경북 조사망률(명): ('24.8월)10.7→('25.8월)10.0→('26.8월)9.9
- 경남 조사망률(명): ('24.8월)9.3→('25.8월)8.0→('26.8월)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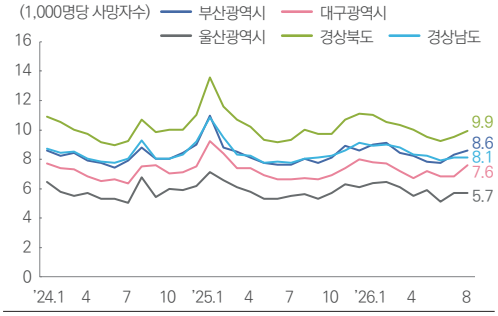
• 전라권은 높은 수준에서 2025년 하락 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며, 전북이 전남광주보다 대체로 다소 높은 수준

- 전남광주 조사망률(명): ('24.8월)9.8→('25.8월)8.5→('26.8월)9.2
- 전북 조사망률(명): ('24.8월)10.4→('25.8월)8.9→('26.8월)9.7

• 강원과 제주는 2025년 저점 후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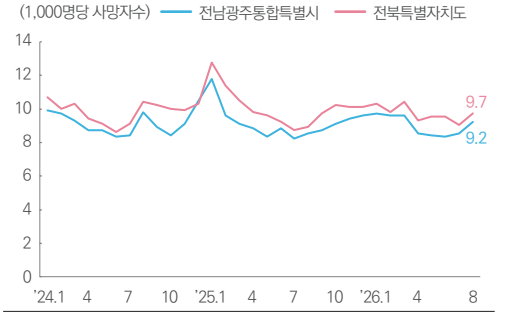
- 강원 조사망률(명): ('24.8월)9.7→('25.8월)8.8→('26.8월)9.5
- 제주 조사망률(명): ('24.8월)7.2→('25.8월)6.7→('26.8월)7.4

그림 32 | 경상권 조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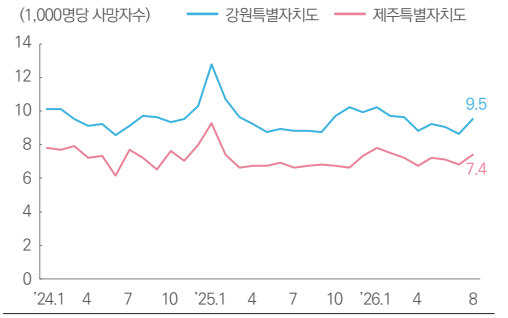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33 | 전라권 조사망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34 | 강원도, 제주도 조사망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Box 1]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5년 사망자 수는 362,968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 중 54.7% 차지
  - 뒤이어 60~79세 33.4%, 40~59세 9.7%, 0~39세 2.3% 순
- 3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폐렴이며, 3개 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42.7%
  - 뒤이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

연령대별로 주요 사망원인은 다르며, 젊은 연령대의 주요 사망원인은 자살이며, 중년 이상 연령대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인 상황

-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남
  -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원인 2위는 암인 상황
- 50대 이상부터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의 사망원인 2위는 연령대별로 다르며, 50대는 자살, 60대와 70대는 심장질환, 80세 이상은 폐렴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

	0세	1~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위	출생 관련 질병	암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암	암	암	암
2위	선천기형, 염색체 이상	선천기형, 염색체 이상	암	암	암	암	자살	심장 질환	심장 질환	폐렴
3위	돌연사	인플루엔자	운수 사고	운수 사고	심장 질환	간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

성별 사망 순위에서는 1위부터 4위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지만, 5위부터는 차이가 발생

- 양성 간 사망원인 1위부터 4위는 각각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
- 남성의 주요 사망원인 5위부터 10위는 자살, 당뇨병,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순
-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 5위부터 10위는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패혈증, 자살, 간 질환 순

다. 자연증감

➲ 8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82개월째 하회하여 인구의 자연감소 지속

- 8월 인구는 6,605명 자연감소했지만 자연감소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1,313명 축소
  - 인구의 자연증감(천명): ('24.8월)-12.0→('25.8월)-7.9→('26.8월)-6.6

그림 35 | 인구의 자연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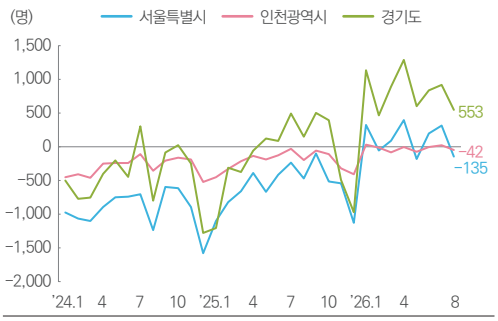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지역단위 자연증감은 수도권이 경기도 주도로 자연증가를 기록한 반면, 전라권·강원·제주는 전년동월대비 자연감소 폭이 다소 확대

- 수도권은 경기도에서 자연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서울·인천은 여전히 자연감소
  - 서울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1,235→('25.8월)-469→('26.8월)-135
  - 인천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355→('25.8월)-195→('26.8월)-42
  - 경기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805→('25.8월)152→('26.8월)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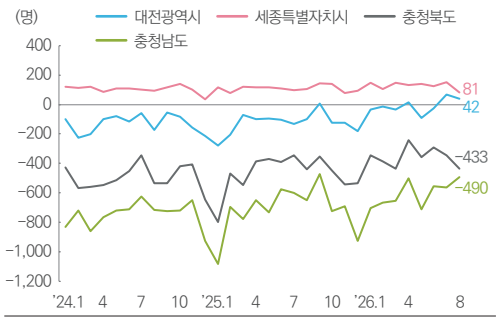
- 충청권은 자연감소 폭이 완만히 축소되었으며, 세종은 자연증가를 유지하고 대전은 자연증가로 전환
  - 대전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176→('25.8월)-98→('26.8월)42
  - 세종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92→('25.8월)106→('26.8월)81
  - 충북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533→('25.8월)-440→('26.8월)-433
  - 충남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716→('25.8월)-649→('26.8월)-490

그림 36 | 수도권 인구의 자연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37 | 충청권 인구의 자연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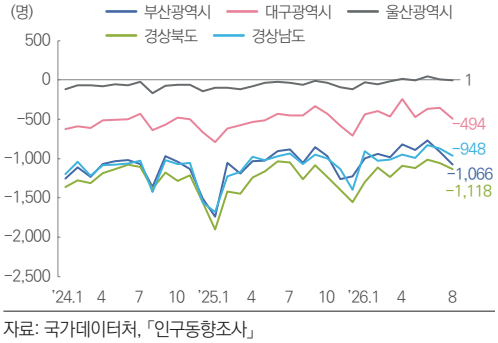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경상권은 자연감소 폭이 완만히 축소되었으며, 울산이 자연증가로 전환**
  - 부산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1,367→('25.8월)-1,046→('26.8월)-1,066
  - 대구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648→('25.8월)-451→('26.8월)-494
  - 울산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189→('25.8월)-62→('26.8월)1
  - 경북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1,380→('25.8월)-1,257→('26.8월)-1,118
  - 경남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1,429→('25.8월)-1,059→('26.8월)-948

- **전라권은 자연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대비 감소 폭은 축소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소폭 확대**
  - 전남광주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1,418→('25.8월)-1,018→('26.8월)-1,027
  - 전북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963→('25.8월)-733→('26.8월)-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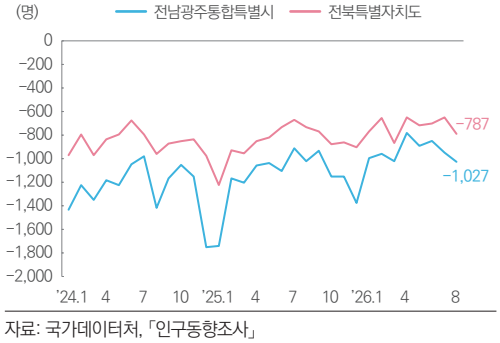
- **강원과 제주는 전년동월대비 자연감소 폭이 확대**
  - 강원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728→('25.8월)-582→('26.8월)-597
  - 제주 인구의 자연증감(명): ('24.8월)-168→('25.8월)-117→('26.8월)-144

그림 38 | 경상권 인구의 자연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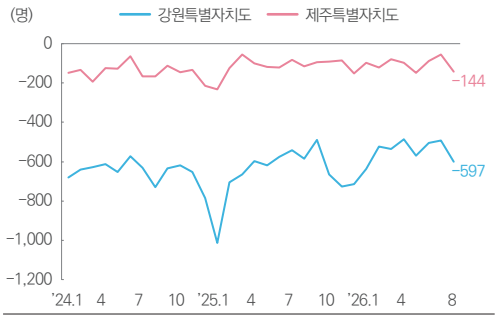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39 | 전라권 인구의 자연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40 | 강원도, 제주도 인구의 자연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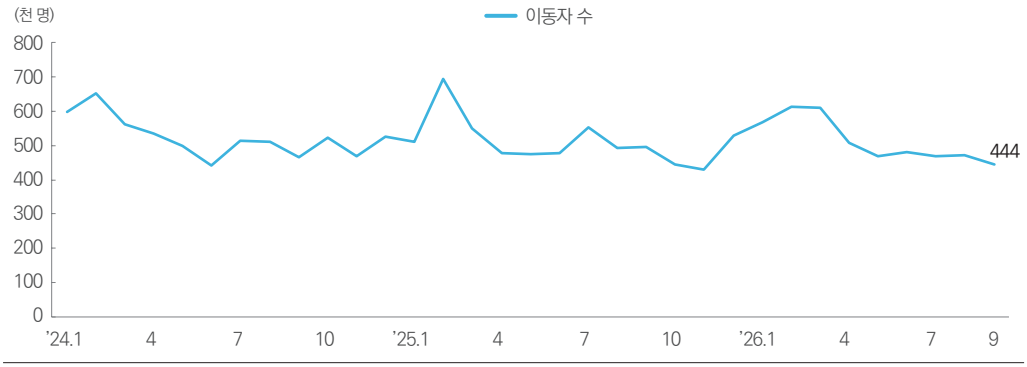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라. 인구이동

➲ 이동자 수는 뚜렷한 추세적 증가 및 감소 없이 일정 범위 안에서 계절적 등락이 반복

- 9월 이동자 수는 44.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5만명, 10.1% 감소
  - 이동자 수(만명): ('24.9월)46.3→('25.9월)49.4→('26.9월)44.4

그림 41 | 이동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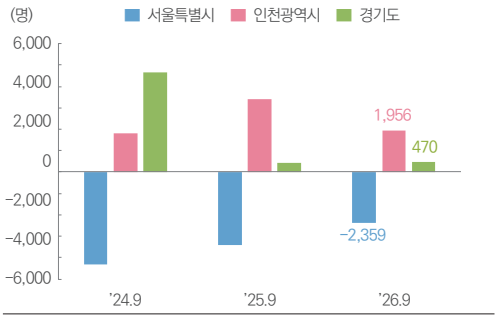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구 순이동은 인천·경기가 전 기간 순유입을, 서울이 가장 큰 순유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부분은 순유출이나 2026년 9월 강원과 대전·충북·충남은 순유입

- 수도권은 경기·인천의 순유입과 서울의 대규모 순유출이 대비
  - 서울 인구 순이동(명): ('24.9월)-4,300→('25.9월)-3,382→('26.9월)-2,359
  - 인천 인구 순이동(명): ('24.9월)1,809→('25.9월)3,422→('26.9월)1,956
  - 경기 인구 순이동(명): ('24.9월)4,659→('25.9월)422→('26.9월)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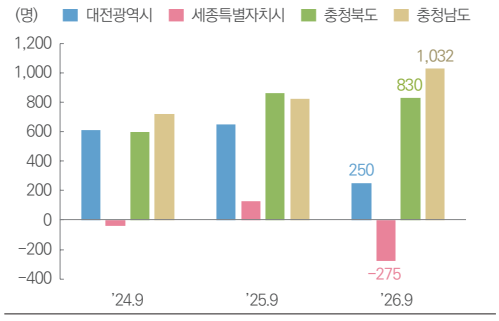
• 충청권은 충북·충남이 순유입을 주도하는 가운데 세종은 순유출로 전환
  - 대전 인구 순이동(명): ('24.9월)614→('25.9월)649→('26.9월)250
  - 세종 인구 순이동(명): ('24.9월)-37→('25.9월)127→('26.9월)-275
  - 충북 인구 순이동(명): ('24.9월)596→('25.9월)861→('26.9월)830
  - 충남 인구 순이동(명): ('24.9월)718→('25.9월)823→('26.9월)1,032

그림 42 | 수도권 인구 순이동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43 | 충청권 인구 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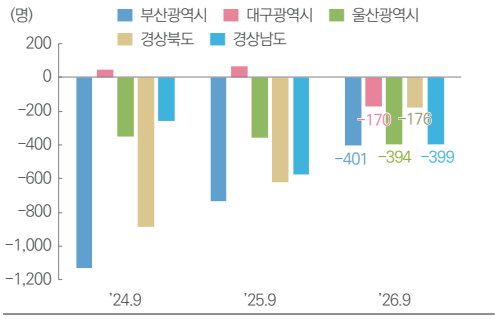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경상권은 모든 지역이 순유출
  - 부산 인구 순이동(명): ('24.9월)-1,127→('25.9월)-731→('26.9월)-401
  - 대구 인구 순이동(명): ('24.9월)43→('25.9월)65→('26.9월)-170
  - 울산 인구 순이동(명): ('24.9월)-349→('25.9월)-359→('26.9월)-394
  - 경북 인구 순이동(명): ('24.9월)-886→('25.9월)-620→('26.9월)-176
  - 경남 인구 순이동(명): ('24.9월)-255→('25.9월)-576→('26.9월)-399

• 전라권은 전남광주의 순유출 폭이 전년동월대비 축소된 반면 전북은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
  - 전남광주 인구 순이동(명): ('24.9월)-423→('25.9월)-770→('26.9월)-531
  - 전북 인구 순이동(명): ('24.9월)-671→('25.9월)108→('26.9월)-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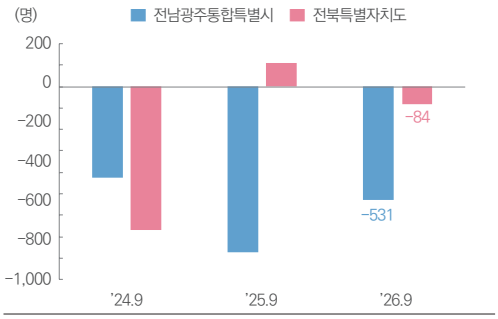
• 강원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제주는 순유출 폭이 소폭 축소
  - 강원 인구 순이동(명): ('24.9월)-46→('25.9월)211→('26.9월)473
  - 제주 인구 순이동(명): ('24.9월)-345→('25.9월)-250→('26.9월)-222

그림 44 | 경상권 인구 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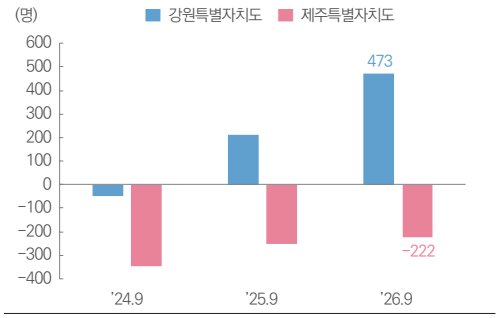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45 | 전라권 인구 순이동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46 | 강원도, 제주도 인구 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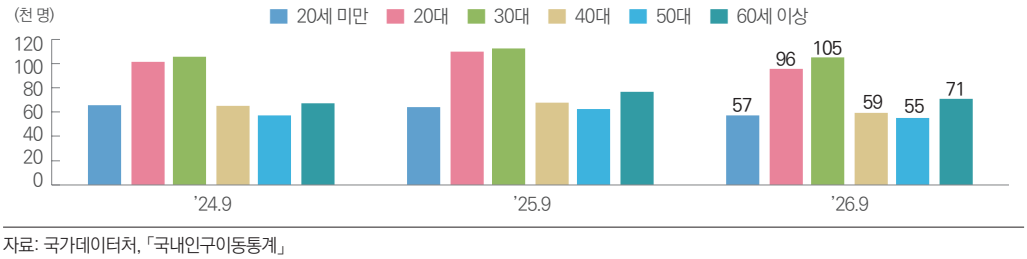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연령별 이동은 20~30대가 주도하는 가운데,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대·40대·50대의 감소폭이 10% 이상으로 컸던 반면, 3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6.8%와 -7.4%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음
  - 20세 미만 이동자 수(만명): ('24.9월)6.6→('25.9월)6.4→('26.9월)5.7
  - 20대 이동자 수(만명): ('24.9월)10.2→('25.9월)11.0→('26.9월)9.6
  - 30대 이동자 수(만명): ('24.9월)10.6→('25.9월)11.3→('26.9월)10.5
  - 40대 이동자 수(만명): ('24.9월)6.5→('25.9월)6.8→('26.9월)5.9
  - 50대 이동자 수(만명): ('24.9월)5.7→('25.9월)6.3→('26.9월)5.5
  - 60세 이상 이동자 수(만명): ('24.9월)6.7→('25.9월)7.7→('26.9월)7.1

그림 47 | 연령별 이동자 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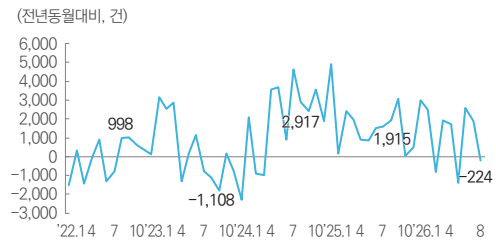
CHAPTER
03 가족

가. 혼인 및 이혼

➲ 8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224건 감소하여 2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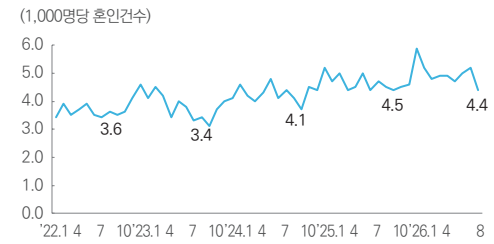
- 8월 혼인 건수는 19,21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24건 감소
  - 혼인 건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건): ('24.8월)2.9→('25.8월)1.9→('26.8월)-0.2
- 8월 조혼인율[5]은 4.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1건 감소
  - 조혼인율(건수): ('24.8월)4.1→('25.8월)4.5→('26.8월)4.4

그림 48 | 혼인 건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49 |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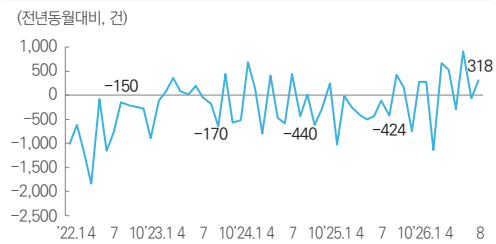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8월 이혼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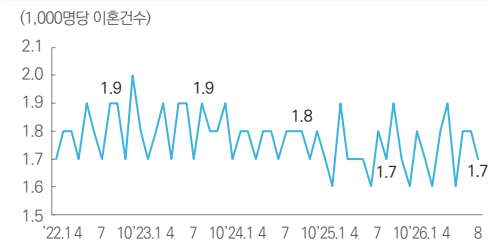
- 8월 이혼 건수는 7,51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18건 증가
  - 이혼 건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건): ('24.8월)-0.4→('25.8월)-0.4→('26.8월)0.3
- 8월 조이혼율[6]은 1.7건으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치를 유지
  - 조이혼율(건): ('24.8월)1.8→('25.8월)1.7→('26.8월)1.7

그림 50 | 이혼 건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51 | 조이혼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5]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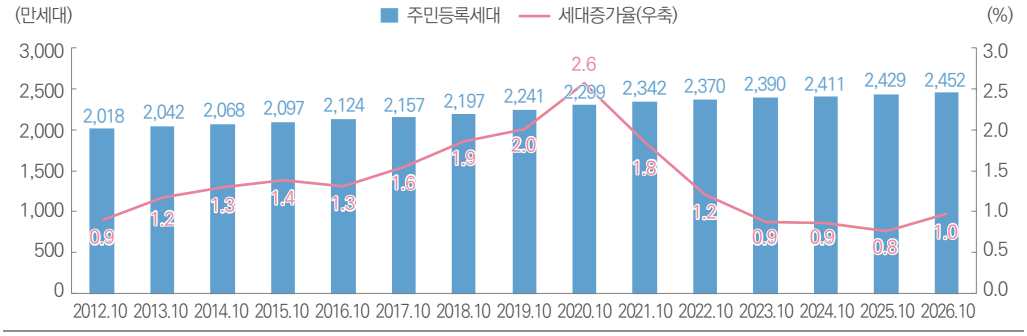
[6]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

나. 가구 수

➲ 10월 주민등록세대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1% 내외로 유지

- 10월 주민등록세대는 2,452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3만세대 증가
  - 주민등록세대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세대(%)): ('24.10월)20.3(0.9)→('25.10월)18.3(0.8)→('26.10월)23.4(1.0)

그림 52 | 주민등록세대 및 세대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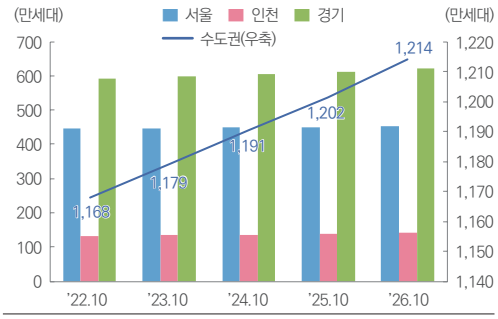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 지역 단위로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등록세대 수가 증가

- 수도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1,214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수도권 (만세대): ('24.10월)1,191→('25.10월)1,202→('26.10월)1,214
  - 서울 (만세대): ('24.10월)448→('25.10월)450→('26.10월)452
  - 인천 (만세대): ('24.10월)137→('25.10월)140→('26.10월)142
  - 경기 (만세대): ('24.10월)605→('25.10월)611→('26.10월)620
- 충청권 모든 지역의 세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청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276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충청권 (만세대): ('24.10월)269→('25.10월)272→('26.10월)276
  - 대전 (만세대): ('24.10월)69→('25.10월)70→('26.10월)71
  - 세종 (만세대): ('24.10월)16→('25.10월)17→('26.10월)17
  - 충북 (만세대): ('24.10월)79→('25.10월)80→('26.10월)81
  - 충남 (만세대): ('24.10월)105→('25.10월)106→('26.10월)107
- 경상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607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경상권 (만세대): ('24.10월)600→('25.10월)603→('26.10월)607
  - 부산 (만세대): ('24.10월)157→('25.10월)157→('26.10월)158
  - 대구 (만세대): ('24.10월)110→('25.10월)111→('26.10월)112
  - 울산 (만세대): ('24.10월)49→('25.10월)50→('26.10월)50
  - 경북 (만세대): ('24.10월)129→('25.10월)130→('26.10월)130
  - 경남 (만세대): ('24.10월)154→('25.10월)155→('26.10월)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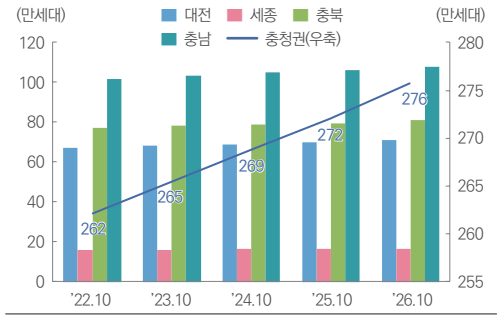
- 전라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245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전라권 (만세대): ('24.10월)243→('25.10월)244→('26.10월)245
  - 전남광주 (만세대): ('24.10월)157→('25.10월)157→('26.10월)158
  - 전북 (만세대): ('24.10월)86→('25.10월)87→('26.10월)87
- 강원도와 제주도의 주민등록세대 수는 각각 78만세대, 32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2%, 0.8% 증가
  - 강원 (만세대): ('24.10월)76→('25.10월)77→('26.10월)78
  - 제주 (만세대): ('24.10월)31→('25.10월)32→('26.10월)32

그림 53 | 수도권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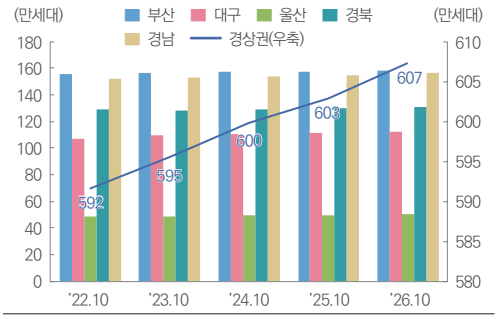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54 | 충청권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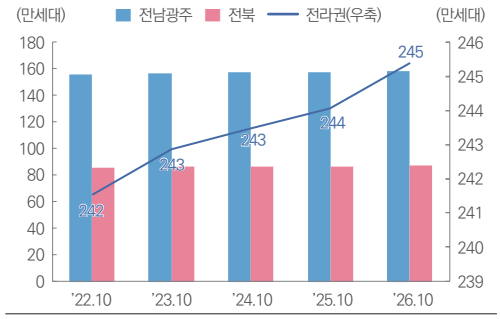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55 | 경상권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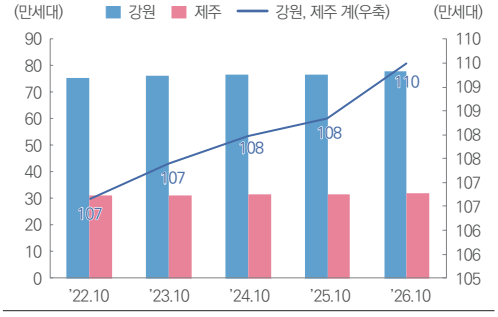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56 | 전라권 세대 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57 | 강원도, 제주도 세대 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Ⅱ 고용 동향

요약

고용 동향(2026.10)



10월 취업자 수는 13.9만명 증가하여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였으나 20대 고용률은 지속 악화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18.4→(9월)11.3→(10월)13.9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0.1%p 하락한 가운데 20대 남녀는 각각 1.7%p, 1.6%p의 큰 폭으로 하락
-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24.9만), 운수·창고업(+4.8만)이 고용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13.7만)에서 대폭 감소하였으며 건설업(-4.2만)은 감소세 유지

10월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청년 실업률은 5.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단, 청년 확장실업률은 15.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9월 채용은 건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빈일자리율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채용 인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6.8→(8월)14.4→(9월)10.4
- 빈일자리율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7월)0.00→(8월)-0.02→(9월)0.06

8월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명목임금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3.1→(7월)2.5→(8월)3.9

주요 용어

고용량 관련

- **15세 이상 인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단, 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자, 학생, 취업준비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등)
- **경제활동인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로서, 취업자 또는 실업자를 말함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 이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하였거나, 일시휴직 등의 이유로 쉬었지만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경우 포함)와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경제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중(%)
- **확장실업률**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와 잠재구직자(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
  - 확장실업률은 실업률보다 넓은 범위에서 노동력 미활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음
- **구인배수:** 신규 구직 건수 대비 신규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

노동력 수급 관련

- **입직률:** 현직에 있는 근로자 대비 채용·재배치 등에 의해 신규 영입되는 근로자 비율

$$= \frac{\text{조사기준월 입직자}}{\text{(조사기준월 근로자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2}} \times 100\ (\%)$$

- **이직률:** 현직에 있는 근로자 대비 퇴사·이직·재배치 등에 의해 현직을 이탈하는 근로자(이직자) 비율

$$= \frac{\text{조사기준월 이직자}}{\text{(조사기준월 근로자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2}} \times 100\ (\%)$$

- **빈일자리율:** 전체 일자리 중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빈일자리) 비중으로, 구인난의 한 지표

$$= \frac{\text{빈일자리}}{\text{근로자현원 + 빈일자리}} \times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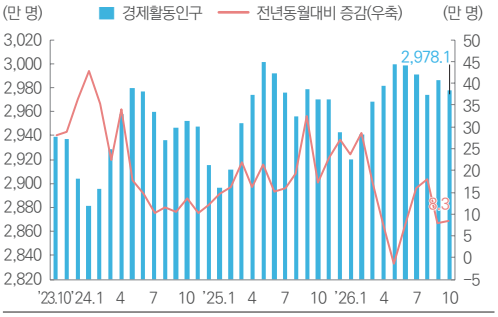
CHAPTER
01 고용량

가. 고용총량

➲ **10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8.3만명, 취업자 수는 13.9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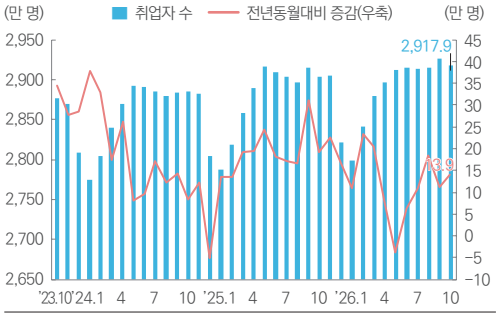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는 2,978.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만명(0.3%) 증가
  - 경제활동인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18.0→(9월)7.8→(10월)8.3
-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8월)0.0→(9월)-0.2→(10월)-0.2
- 취업자 수는 2,917.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만명(0.5%)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18.4→(9월)11.3→(10월)13.9
- 고용률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7]
  -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8월)0.0→(9월)-0.2→(10월)-0.1
-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8월)0.0→(9월)-0.1→(10월)-0.2
- 청년(15~29세) 실업률은 5.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청년 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8월)0.5→(9월)0.6→(10월)-0.1

그림 1 | 경제활동인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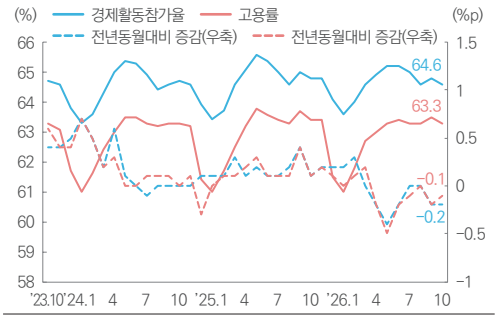
그림 2 | 취업자 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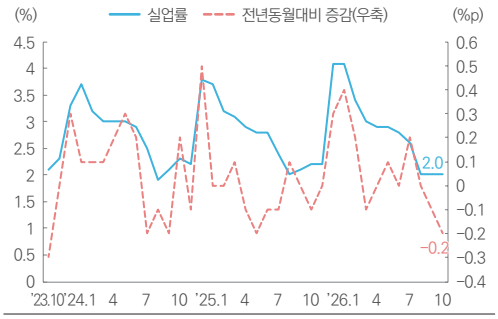
[7] 고용률의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 폭(26.1만명)이 분자인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상회하여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하락

그림 3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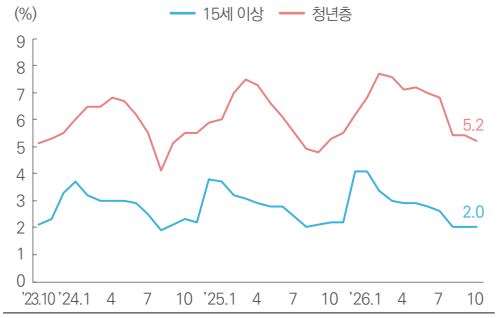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고용보조지표

10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5세 이상 인구는 하락, 청년층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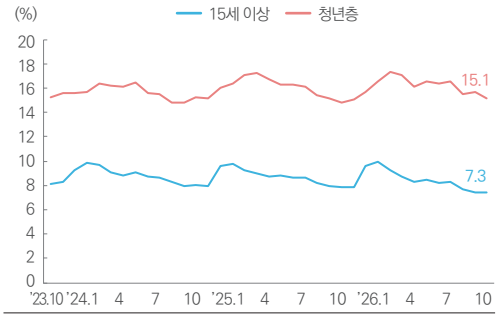
- 15세 이상 확장실업률은 7.3%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15.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15세 이상 확장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8월)-0.6→(9월)-0.6→(10월)-0.5
  - 청년층 확장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8월)0.1→(9월)0.5→(10월)0.4

그림 5 | 15세 이상 및 청년층 실업률



주: 청년층은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 | 15세 이상 및 청년층 확장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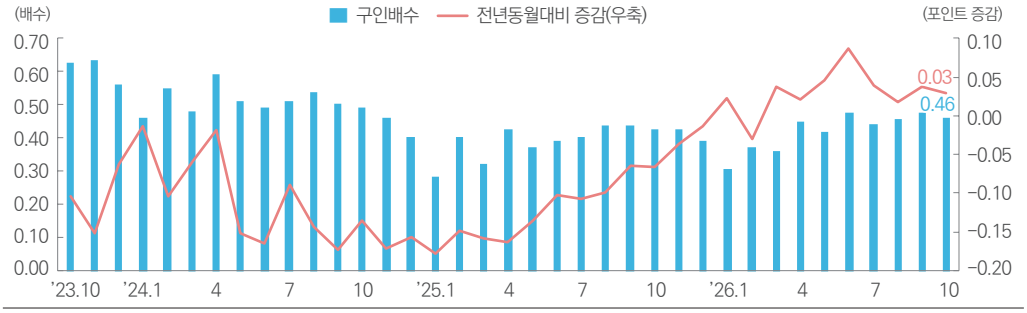
주: 청년층은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0월 워크넷 구인배수는 8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

- 구인배수는 0.46(구직자 100명당 46개의 일자리)로 전년동월대비 0.03 포인트 상승
  - 구인배수(전년동월대비, 포인트 증감): ('26.8월)0.02→(9월)0.04→(10월)0.03

- 구인배수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하락하였으나 2026년 3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

그림 7 | 구인배수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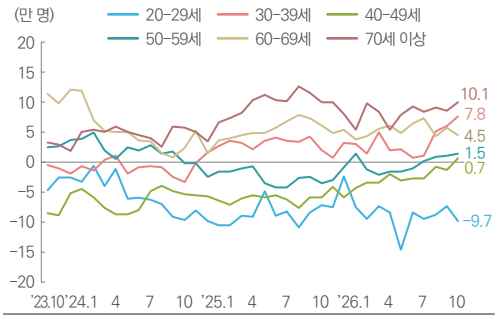
다. 성·연령별 취업자

➲ 10월 취업자 수는 남녀 모두 20대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대 및 60세 이상은 증가세 유지

- 남성은 20대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대 및 60세 이상은 증가세 유지
  - 2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8.7→(9월)-7.2→(10월)-9.7
  - 30대: ('26.8월)5.2→(9월)6.1→(10월)7.8
  - 40대: ('26.8월)-0.7→(9월)-1.2→(10월)0.7
  - 50대: ('26.8월)1.0→(9월)1.2→(10월)1.5
  - 60대: ('26.8월)4.4→(9월)5.7→(10월)4.5
  - 70세 이상: ('26.8월)9.2→(9월)8.6→(10월)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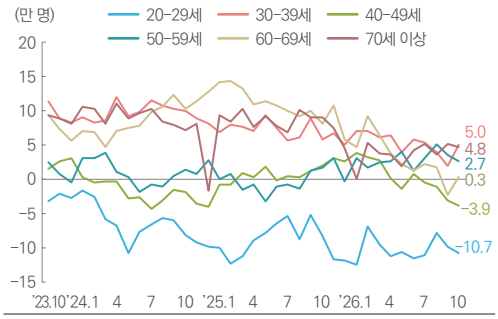
- 여성은 20대·40대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대·50대 및 70세 이상은 증가세 유지
  - 2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7.7→(9월)-9.8→(10월)-10.7
  - 30대: ('26.8월)3.9→(9월)2.0→(10월)5.0
  - 40대: ('26.8월)-1.1→(9월)-3.0→(10월)-3.9
  - 50대: ('26.8월)5.2→(9월)3.6→(10월)2.7
  - 60대: ('26.8월)1.8→(9월)-2.3→(10월)0.3
  - 70세 이상: ('26.8월)3.7→(9월)5.2→(10월)4.8

그림 8 |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남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9 |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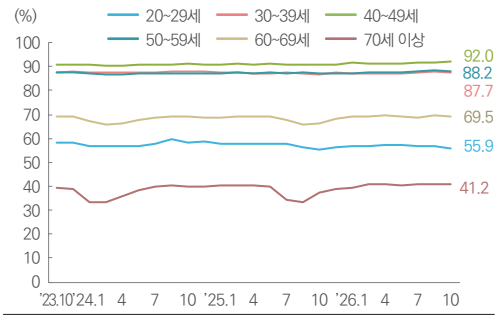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0월 고용률은 남녀 모두 20대를 중심으로 하락, 30~50대는 상승

- 남성 고용률은 20대가 1.7%p 하락, 나머지 연령대는 상승
  - 20대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8월)-1.2→(9월)-0.7→(10월)-1.7
  - 30대: ('26.8월)0.0→(9월)0.3→(10월)0.8
  - 40대: ('26.8월)0.9→(9월)0.7→(10월)1.2
  - 50대: ('26.8월)1.0→(9월)1.0→(10월)1.1
  - 60대: ('26.8월)-0.1→(9월)0.3→(10월)0.1
  - 70세 이상: ('26.8월)0.6→(9월)0.4→(10월)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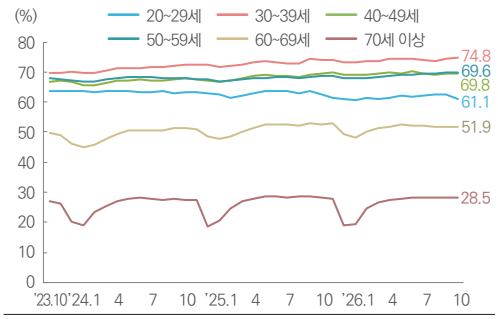
- 여성 고용률은 20대가 1.6%p 하락한 반면 30대~50대는 상승, 60세 이상은 하락
  - 20대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8월)-0.4→(9월)-1.2→(10월)-1.6
  - 30대: ('26.8월)0.7→(9월)0.0→(10월)0.9
  - 40대: ('26.8월)0.8→(9월)0.3→(10월)0.1
  - 50대: ('26.8월)1.8→(9월)1.4→(10월)1.2
  - 60대: ('26.8월)-0.3→(9월)-1.3→(10월)-0.6
  - 70세 이상: ('26.8월)-0.4→(9월)-0.1→(10월)-0.1

그림 10 |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남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1 |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여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라. 산업별 취업자

➲ 10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업(+24.9만명), 운수·창고업(+4.8만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

- 보건·사회복지업은 24.9만명 증가하여 고용 성장을 주도
  -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18.6→(9월)20.7→(10월)24.9

- 운수·창고업은 4.8만명 증가하여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큰 증가폭 기록
  - 운수·창고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2.1→(9월)5.4→(10월)4.8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2.7만명 증가하여 11개월 만에 반등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0.5→(9월)0.0→(10월)2.7

- 숙박·음식점업은 13.7만명 감소하여 2021년 이후 최대 감소폭 기록
  -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6.1→(9월)-9.7→(10월)-13.7

- 건설업 취업자 수는 4.2만명 감소하여 30개월 연속 감소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3.2→(9월)-4.8→(10월)-4.2

표 1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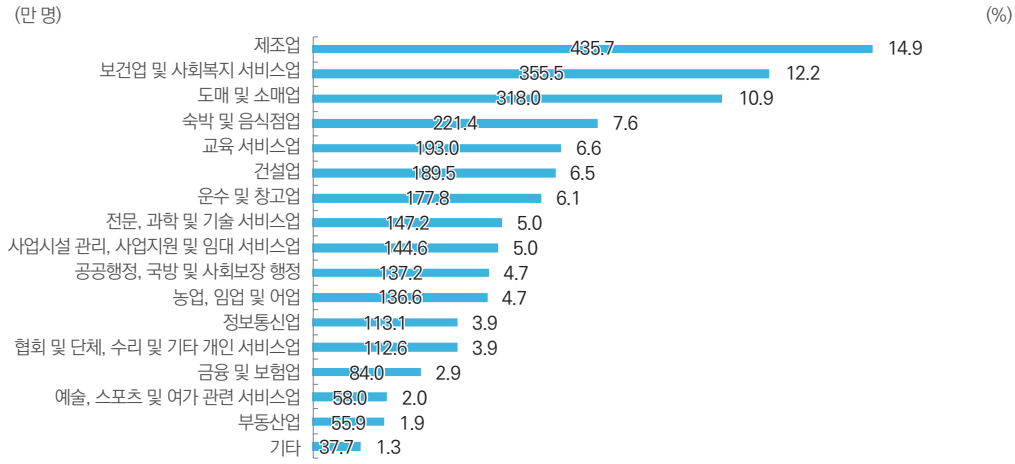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대비, 만 명)

산업별	'25.11월	12월	'2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농업, 임업 및 어업	-13.2	-11.7	-10.7	-9.0	-5.8	-9.2	-12.1	-9.5	-8.0	-10.9	-9.4	-10.1
제조업	-4.1	-6.3	-2.3	-1.6	-4.2	-5.5	-14.0	-9.7	-6.8	-3.8	1.6	-0.7
건설업	-13.1	-6.3	-2.0	-4.0	-1.6	-0.8	-4.3	-6.7	-5.7	-3.2	-4.8	-4.2
도매 및 소매업	1.1	4.4	2.3	2.2	-1.8	-5.2	-3.6	-4.4	-0.5	2.1	-0.1	0.0
운수 및 창고업	4.1	7.2	7.1	8.1	7.5	1.8	3.6	4.8	-0.5	2.1	5.4	4.8
숙박 및 음식점업	-2.2	-2.2	-1.6	-2.7	-0.2	-2.9	2.0	1.0	0.2	-6.1	-9.7	-13.7
정보통신업	2.2	0.7	-2.1	-4.2	0.3	1.8	2.6	4.7	2.2	2.8	1.0	0.3
금융 및 보험업	4.9	2.8	1.8	2.2	0.9	0.2	0.0	1.5	3.4	2.3	3.2	2.4
부동산업	0.2	1.1	3.0	3.5	3.4	4.9	2.8	2.4	1.8	0.9	0.7	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	-5.6	-9.8	-10.5	-6.1	-11.5	-8.9	-6.0	-4.4	-0.5	0.0	2.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3	4.9	4.2	4.2	2.1	3.3	1.6	2.0	3.4	4.5	2.6	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3	-0.4	-4.1	-3.0	-7.7	-1.7	0.2	0.2	4.6	3.2	2.7	2.5
교육 서비스업	0.7	2.2	3.6	5.8	1.7	-0.4	-0.6	-1.9	-3.0	-2.4	-5.3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1	22.0	18.5	28.8	29.4	26.1	21.2	21.4	17.3	18.6	20.7	2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1	5.5	4.5	7.0	4.4	5.4	4.4	5.5	4.8	7.3	1.9	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6	0.5	1.1	-1.4	0.1	0.5	0.0	-1.3	-1.4	-1.3	-2.3	-1.0
기타	0.7	-2.0	-2.6	-2.1	-2.0	0.6	1.4	2.3	3.2	2.9	2.9	3.0
계 (전체 취업자 수 증감)	22.5	16.8	10.8	23.4	20.6	7.4	-4.0	6.3	10.8	18.4	11.3	13.9

주: '기타'는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2 | 산업별 취업자 수 및 비중



주: 1. 2026년 10월 기준
2. '기타'는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 고용형태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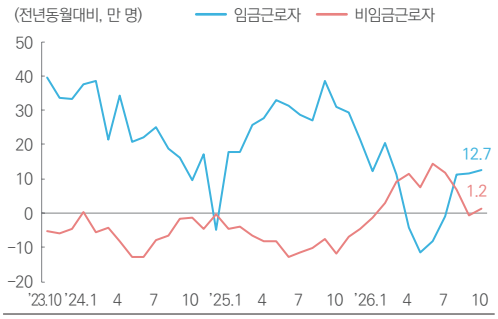
➲ 10월 임금근로자는 12.7만명 증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1.2만명 증가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7만명 증가로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 유지
  - 임금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11.3→(9월)11.7→(10월)12.7

- 임금근로자 유형별로는 상용직이 28.7만명 증가,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0.7만명, 5.3만명 감소
  - 상용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18.0→(9월)25.3→(10월)28.7
  - 임시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5.0→(9월)-8.1→(10월)-10.7
  - 일용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1.7→(9월)-5.5→(10월)-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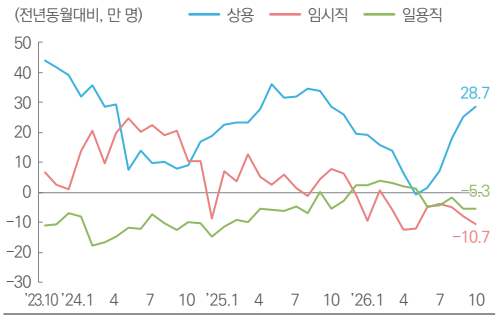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는 1.2만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7.1→(9월)-0.5→(10월)1.2

그림 13 |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4 | 임금근로자 유형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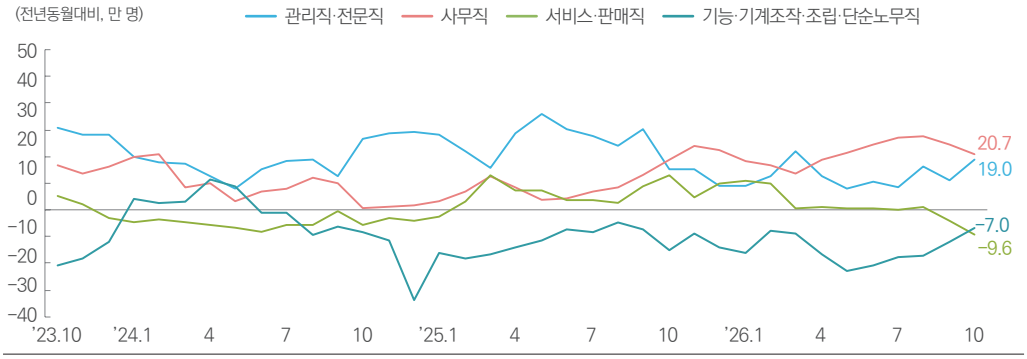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바. 직업별 취업자

➲ **10월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취업자 수는 증가, 서비스·판매직,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은 감소**

- 관리직·전문직은 729.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0만명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16.2→(9월)10.8→(10월)19.0
- 사무직은 543.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7만명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27.6→(9월)24.7→(10월)20.7
- 서비스·판매직은 606.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만명 감소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0.9→(9월)-4.4→(10월)-9.6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은 90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만명 감소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8월)-17.4→(9월)-12.0→(10월)-7.0

그림 15 | 직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CHAPTER
02 노동력 수급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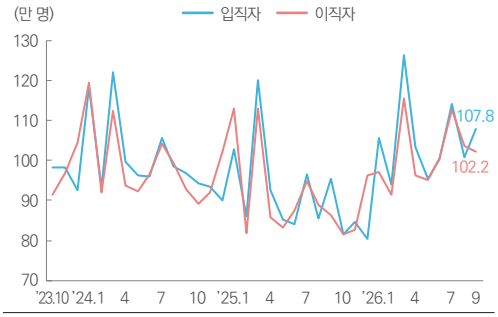
가. 입직과 이직

➲ 9월 입·이직은 총 입·이직자와 입·이직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입직자는 107.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3만명 증가, 입직률은 5.6%로 0.6%p 상승
  - 입직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7.7→(8월)15.4→(9월)12.3
  - 입직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7월)0.8→(8월)0.7→(9월)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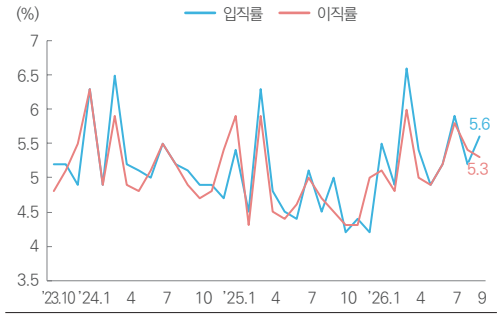
- 이직자는 102.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0만명 증가, 이직률은 5.3%로 0.8%p 상승
  - 이직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7.8→(8월)14.7→(9월)16.0
  - 이직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7월)0.8→(8월)0.7→(9월)0.8

그림 16 | 입·이직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17 | 입·이직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나. 채용

➲ 9월 전년동월대비 채용과 기타 입직이 모두 증가

- 채용 인원은 100.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4만명 증가
  - 채용 인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6.8→(8월)14.4→(9월)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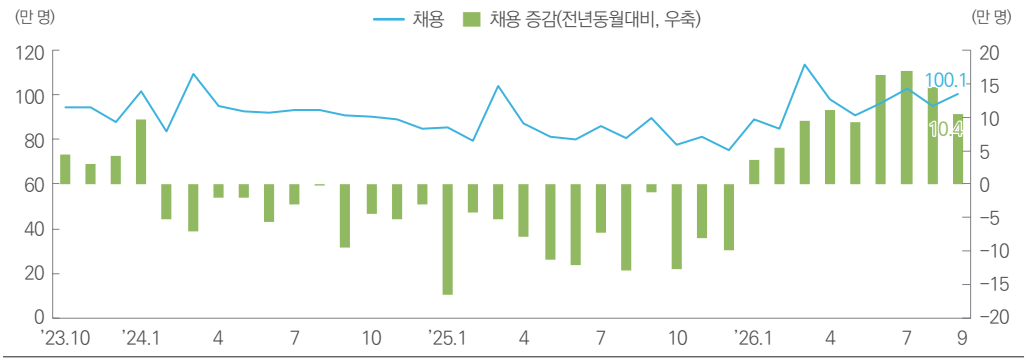
- 기타 입직자[8]는 7.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명 증가
  - 기타 입직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0.8→(8월)1.1→(9월)1.9

[8] 기타 입직은 본·지사간 전입, 복직 등에 의한 입직을 의미

상용직·임시·일용직과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채용 증가

- (고용형태별) 상용직 채용은 3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 증가, 임시·일용직 채용은 65.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4만명 증가
  - 상용직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3.6→(8월)3.3→(9월)1.0
  - 임시·일용직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3.2→(8월)11.0→(9월)9.4

그림 18 | 채용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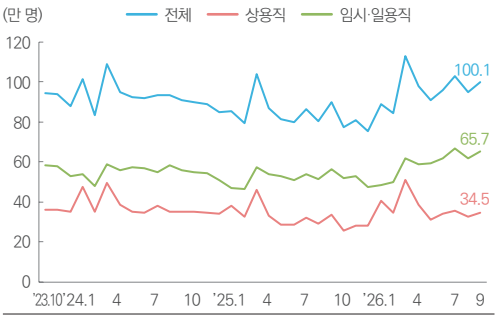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 (규모별) 3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인원은 65.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만명 증가, 30~299인 사업체는 20.7만명으로 3.2만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13.7만명으로 0.1만명 증가
  - 30인 미만 사업체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9.7→(8월)7.2→(9월)7.1
  - 30~299인 사업체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5.5→(8월)4.5→(9월)3.2
  - 300인 이상 사업체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7→(8월)2.6→(9월)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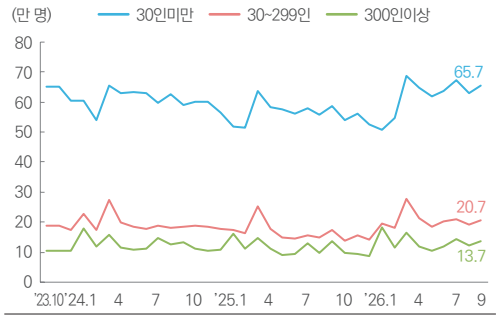
- (업종별) 건설업(+3.5만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3만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0.8만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4만명) 등은 감소
  - 건설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6.1→(8월)6.3→(9월)3.5
  -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2.4→(8월)1.3→(9월)2.3
  - 교육 서비스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0.2→(8월)-0.3→(9월)-0.8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0.4→(8월)0.3→(9월)-0.4

그림 19 | 고용형태별 채용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0 | 사업체 규모별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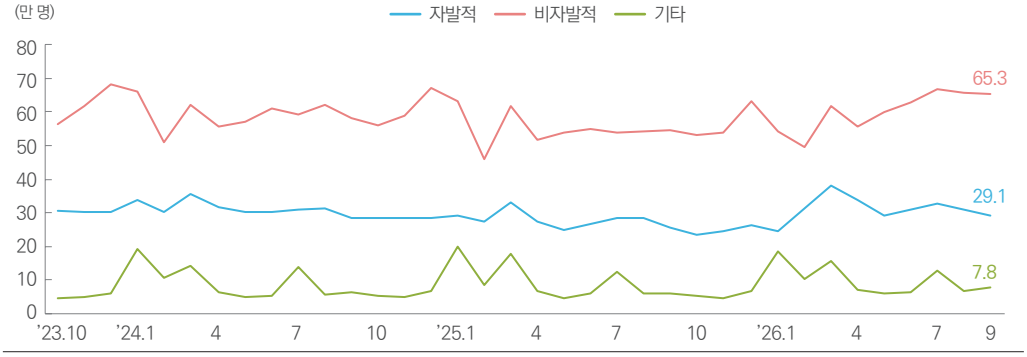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다. 비자발적 이직

➲ 9월 자발적·비자발적·기타 이직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자발적 이직은 29.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명 증가, 비자발적 이직은 65.3만명으로 10.8만명 증가, 기타 이직은 7.8만명으로 1.8만명 증가[9]
  - 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4.2→(8월)2.6→(9월)3.4
  -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3.1→(8월)11.4→(9월)10.8
  - 기타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0.5→(8월)0.7→(9월)1.8

그림 21 | 사유별 이직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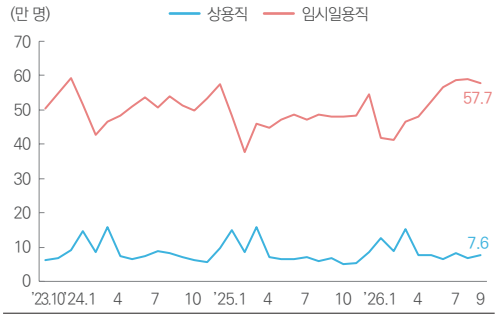
[9]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계약 종료 또는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에 따른 면직 등을 의미. 기타 이직은 본·지사간 전출, 정년퇴직·사망, 병가·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에 의한 이직을 의미

비자발적 이직은 임시·일용직 및 30인 미만 사업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고용형태별) 상용직의 비자발적 이직은 7.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 증가, 임시·일용직의 비자발적 이직은 57.7만명으로 9.8만명 증가
  - 상용직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4→(8월)1.0→(9월)1.0
  -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1.7→(8월)10.4→(9월)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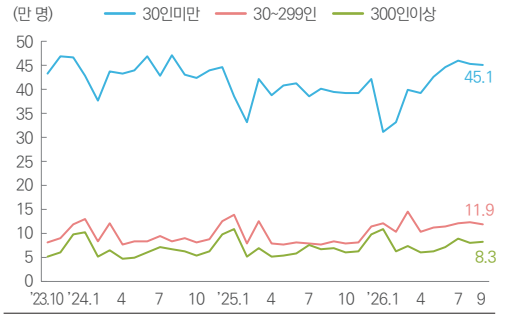
- (규모별)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자발적 이직은 45.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만명 증가, 30~299인 사업체는 11.9만명으로 3.7만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8.3만명으로 1.3만명 증가
  - 30인 미만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7.4→(8월)5.3→(9월)5.7
  - 30~299인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4.3→(8월)4.8→(9월)3.7
  - 300인 이상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7월)1.4→(8월)1.3→(9월)1.3

그림 22 |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이직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3 | 사업체 규모별 비자발적 이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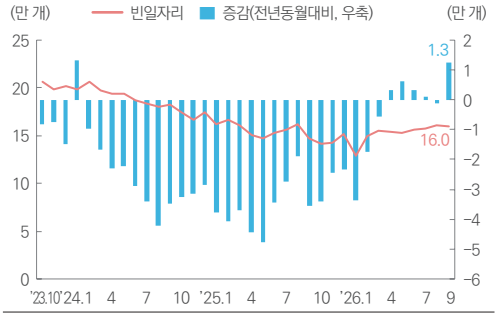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라. 빈일자리

9월 빈일자리 수와 빈일자리율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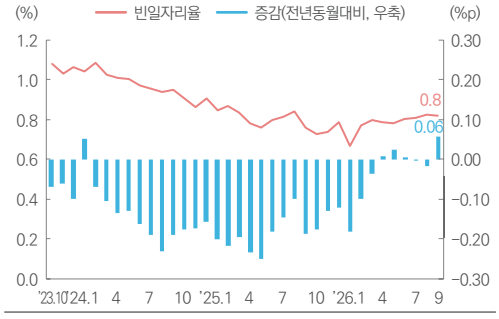
- 빈일자리 수는 16.0만개로 전년동월대비 1.3만개 증가, 빈일자리율은 0.8%로 전년동월대비 0.06%p 상승
  - 빈일자리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개): ('26.7월)0.1→(8월)-0.1→(9월)1.3
  - 빈일자리율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7월)0.00→(8월)-0.02→(9월)0.06
- 빈일자리 수는 8월 감소한 뒤 9월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빈일자리율도 9월 전년동월대비 상승
- (규모별) 30인 미만,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일자리율은 각각 0.9%, 1.0%, 0.2%

그림 24 | 빈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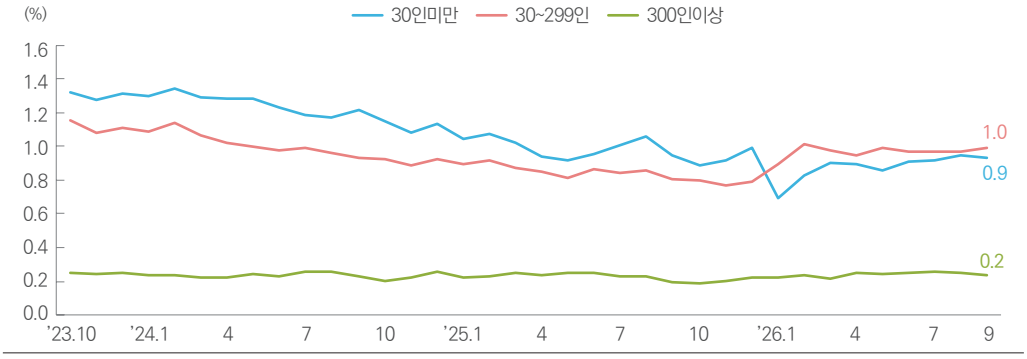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5 | 빈일자리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6 | 사업체 규모별 빈일자리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Box 2] OECD 국가의 국제이동과 이민자 고용 동향[10]

OECD 국가의 영구이민 유입은 2025년 약 607만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12.5% 높은 수준을 유지

- 영국(-32%), 캐나다(-19%), 미국(-14%), 독일(-6%) 등 주요 이민 유입국에서는 감소한 반면, 포르투갈(139%), 이탈리아(46%), 스페인(25%) 등 남유럽 국가에서 크게 증가
  - 이민 유형별로는 가족이민이 전체 영구이민의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노동이민은 20%, 자유 이동 이민 18%, 인도주의적 이민 10%, 기타 6%를 차지
- 임시 외국인 취업허가 규모는 2025년 약 220만 건으로 2024년 대비 4% 감소하였으나, 2019년보다는 19% 높은 수준을 유지
- 국제 유학생 유입은 2024년 190만명에서 2025년 160만명으로 16% 감소하였으며,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감소

2025년 OECD 국가의 이민자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77.1%, 고용률은 70.8%로 전년 대비 각각 0.6%p, 0.3%p 상승하였으나 실업률도 8.3%로 0.3%p 상승

-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수 국가에서 자국 출생자보다 높았으나, 성별·학력별로 상이
  - 이민자 여성의 고용률은 63.4%로 남성(78.5%)보다 15.1%p 낮았으나 격차는 전년대비 0.5%p 축소
  - 저학력 이민자의 고용률(62.1%)은 동일 학력의 자국 출생자(54.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고학력 이민자의 고용률(81.4%)은 자국 출생자(88.3%)보다 6.9%p 낮게 나타남
- 2025년 OECD 국가의 이민자 청년(15~24세) 고용률은 40.4%로 자국 출생 청년 고용률(40.2%)과 비슷한 수준
  - EU 27개국의 이민자 청년 NEET 비율은 16.2%로 자국 청년(9.8%)보다 6.4%p 높은 수준

2025년 한국의 장기·영구이민 유입은 약 6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가운데, 임시·계절 노동이민과 유학생에 대해서는 각각 약 15만 건, 6만 3천 건의 체류허가가 발급

- 한국의 이민자 경제활동참가율은 73.4%, 고용률은 68.9%, 실업률은 6.1% 수준

OECD 국가 및 한국 노동시장 동향(2025년)

	자국 출생자		해외 출생자	
	한국	OECD	한국	OECD
경제활동참가율(%)	72.5	76.0	73.4	77.1
고용률(%)	70.5	71.8	68.9	70.8
실업률(%)	2.8	5.6	6.1	8.3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6

- 최근 한국은 Top-Tier 비자 도입, K-STAR 제도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 유치와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를 축소하고 계절근로(E-8)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관련 관리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

[10]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6, 2026 요약 및 정리

CHAPTER
03 임금 및 가구 소득

가.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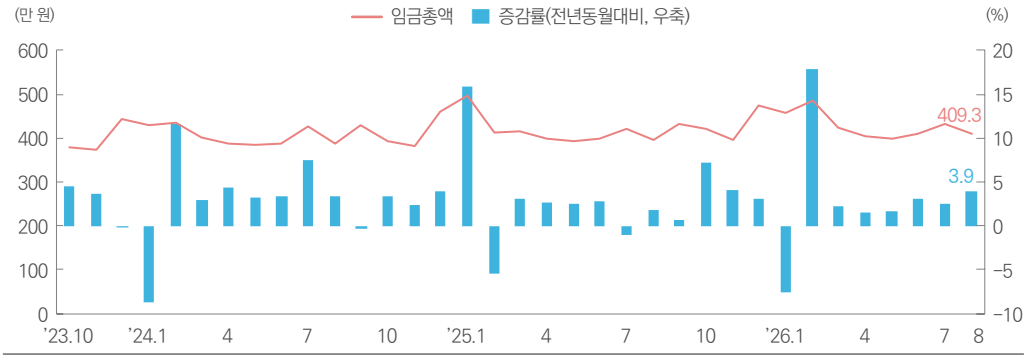
➲ 8월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 임금총액은 409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3.1→(7월)2.5→(8월)3.9

- 상용직 근로자 임금은 438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임시·일용직은 169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상용직 임금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3.6→(7월)3.4→(8월)4.8
  - 임시·일용직 임금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3.8→(7월)-2.6→(8월)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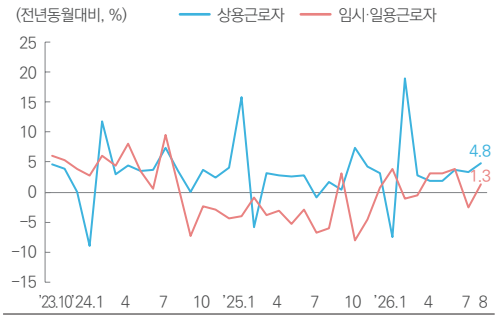
- 상용직 임금 내역별로는 정액급여가 전년동월대비 8.6만원(2.4%) 증가, 초과급여가 전년동월대비 1.7만원(6.6%) 증가,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9.8만원(32.4%) 증가
  - 정액급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원): ('26.6월)8.1(2.2%)→(7월)9.1(2.5%)→(8월)8.6(2.4%)
  - 초과급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원): ('26.6월)1.7(6.2%)→(7월)2.1(8.7%)→(8월)1.7(6.6%)
  - 특별급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원): ('26.6월)5.6(17.2%)→(7월)3.9(6.7%)→(8월)9.8(32.4%)

그림 27 |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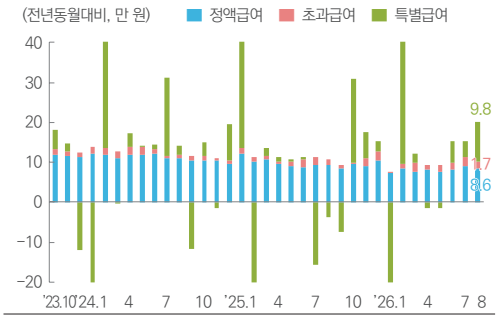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그림 28 | 고용형태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그림 29 | 상용근로자 임금 내역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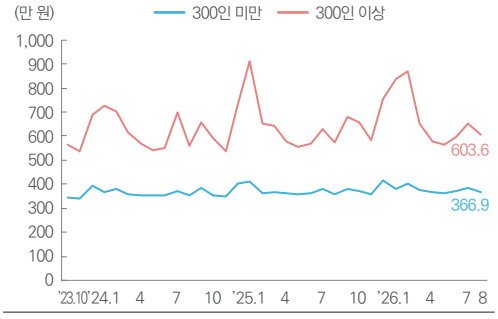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300인 미만 사업체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300인 이상은 5.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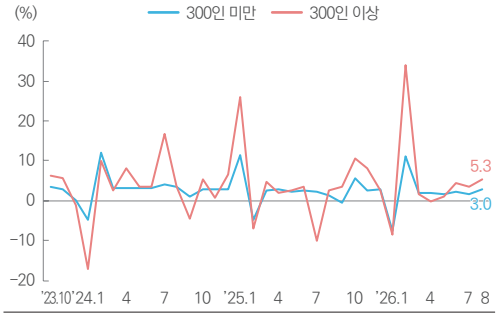
-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임금총액은 366.9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603.6만원으로 5.3% 증가
  -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총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2.3→(7월)1.7→(8월)3.0
  -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6월)4.4→(7월)3.3→(8월)5.3

그림 30 | 사업체 규모별 임금총액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그림 31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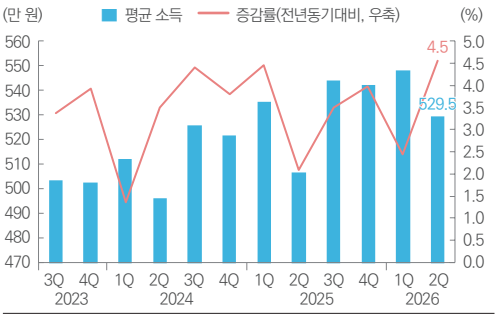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나. 가구 소득

2/4분기 가구 명목 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 명목 평균 근로소득은 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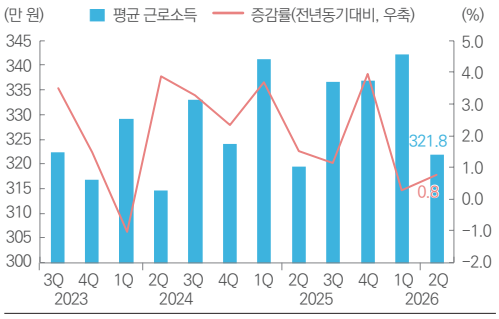
- 전체 가구의 명목 월평균 소득은 53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 (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원으로 0.8% 증가
  - 가구 평균 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4/4분기)4.0→('26.1/4분기)2.4→(2/4분기)4.5
  - 가구 평균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4/4분기)3.9→('26.1/4분기)0.3→(2/4분기)0.8
  - 가구 평균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4/4분기)3.0→('26.1/4분기)2.6→(2/4분기)3.8
  - 가구 평균 재산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4/4분기)-8.9→('26.1/4분기)9.1→(2/4분기)21.3
  - 가구 평균 이전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4/4분기)7.9→('26.1/4분기)9.7→(2/4분기)20.4

그림 32 | 가구 평균 소득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그림 33 | 가구 평균 근로소득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Ⅲ 지속가능 성장

요약

‘SDG4 양질의 교육 보장’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OECD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 조사 대비 하락하였으며,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낮은 수준

- 2025년 읽기·수학 최소숙달수준 도달률은 각각 82.2%, 81.4%로 OECD 회원국 중 모두 3위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대비 각각 3.1%p, 2.4%p 하락
- 2025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33.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1.7%)보다 8.0%p 낮으며, 취업자의 비형식교육·훈련 참여율도 연령대와 관계없이 OECD 평균을 크게 하회

‘SDG5 성평등’ 분야의 경우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고 가사·돌봄노동의 성별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정치적 대표성과 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은 지속

- 2026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8%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2025년 관리직 여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비율은 각각 28.2%, 38.8%로 상승
- 2024년 여성의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은 11.5%로 남성(4.0%)보다 높으며, 성별 격차는 1999년 대비 축소되었으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편

‘SDG16 평화·정의·포용적인 제도’ 분야의 경우 고의살인 피해자 수가 OECD 최저 수준인 반면,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을 하회

- 2024년 인구 10만명당 고의살인 피해자 수는 0.49명으로 2015년(0.74명) 대비 감소하였으며, OECD 38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2025년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 경험률은 0.49%이며, 부패인식지수는 63점으로 OECD 평균(64.7점)을 하회하여 38개국 중 22위를 기록

‘SDG17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전체 및 최저개발국 대상 원조 모두 국제 목표에 미달

- 2025년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20%로 전년(0.21%)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전체(0.26%) 및 UN 목표(0.7%)를 하회
- 최저개발국(LDC) 대상 ODA/GNI 비율은 2024년 0.06%로 국제 목표 하한(0.15%)에 미달하며, 주요 공여국 대비 낮은 수준

일러두기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미래 세대의 평화,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17개 목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므로, 'Ⅲ. 지속가능 성장'에서는 연간 지표를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구성) 15개 목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관련성이 있는 주제를 함께 묶어 지속가능 성장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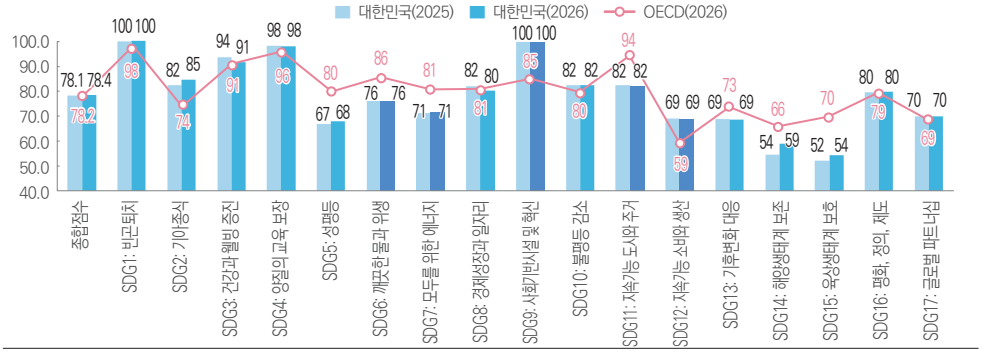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분석 예정 SDG 목표

카테고리	SDG 종류	SDG 영역
보건·건강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3	건강과 웰빙 증진
자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호
생활	6	모두를 위한 물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분야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인적자원·제도	4	양질의 교육 보장
	5	성평등
	16	평화·정의·포용적인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제8호에서는 인적자원 및 제도와 관련된 '양질의 교육 보장(SDG4)', '성평등(SDG5)', '평화·정의·포용적인 제도(SDG16)', '글로벌 파트너십(SDG17)' 관련 분야의 동향 지표 수록

- OECD 국가와 비교 시 우리나라는 성평등(SDG5) 분야에서 열위

2026년 한국과 OECD의 SDG 분야별 점수 비교



자료: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6 (DOI 10.82163/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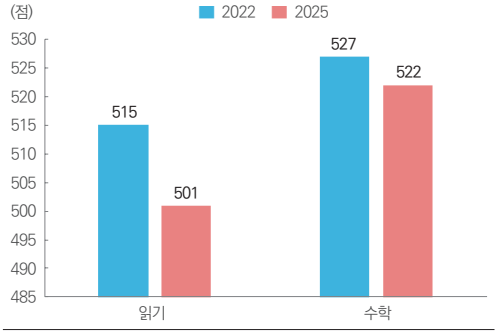
CHAPTER
01 양질의 교육 보장

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11]

202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성취도는 2022년보다 하락하였으며, 수학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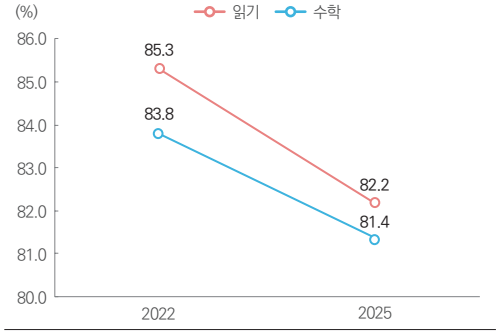
- 읽기 평균점수는 2022년 515점에서 2025년 501점으로 14점 하락하였으며, 수학은 같은 기간 527점에서 522점으로 5점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님
- 최소숙달수준(2수준 이상)에 도달한 학생 비율은 읽기 2022년 85.3%에서 2025년 82.2%로 3.1%p, 수학 2022년 83.8%에서 2025년 81.4%로 2.4%p 하락

그림 1 | 읽기 및 수학 평균점수 변화



자료: OECD, 「PISA 2025」

그림 2 | 읽기 및 수학 최소숙달수준 도달률



주: 만 15세 평가 참여자 중 PISA 2수준 이상 비율
자료: OECD, 「PISA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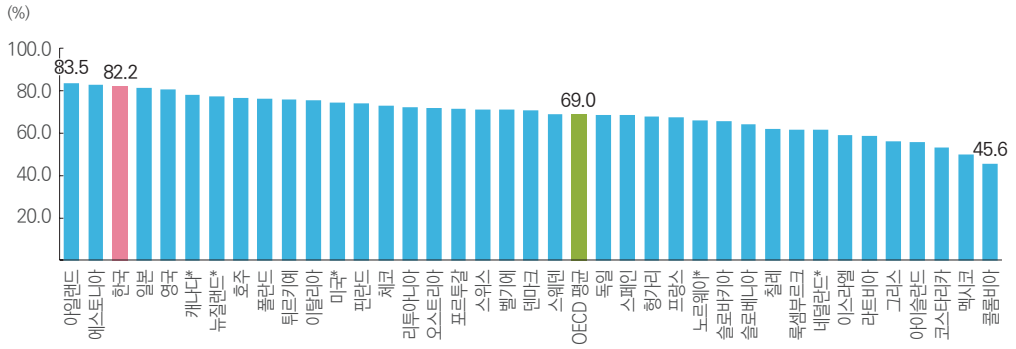
2025년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수학 최소숙달수준 도달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며, 두 분야 모두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유지

- 우리나라의 읽기·수학 최소숙달수준 도달률은 각각 82.2%, 81.4%로 OECD 평균(69.0%, 65.1%)보다 13.2%p, 16.3%p 높으며, 두 분야 모두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

[11] 초등학교 2·3학년, 초등학교 말 및 중학교 말에 읽기와 수학 분야의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성별)을 측정하는 지표(SDG 4.1.1). 본문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참여한 만 15세 학생 중 읽기·수학 분야에서 2수준 이상에 도달한 비율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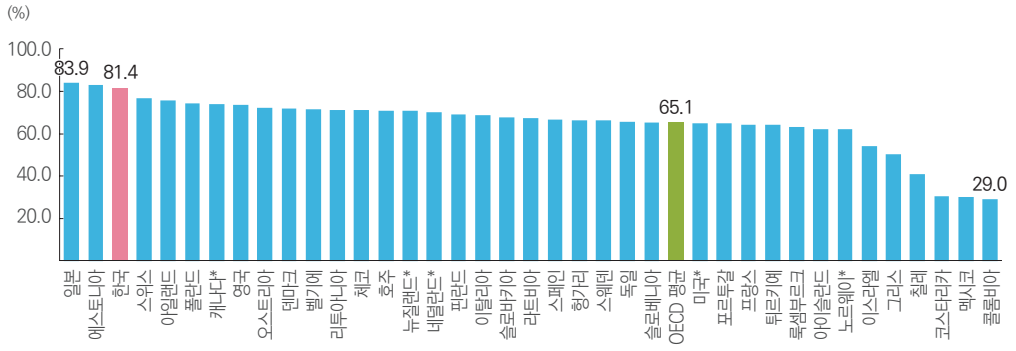
- 국가별 읽기 최소숙달수준 도달률(%): (아일랜드)83.5, (에스토니아)83.0, (한국)82.2, (일본)81.4, (영국)80.5, (미국*)74.3, (독일)68.5
- 국가별 수학 최소숙달수준 도달률(%): (일본)83.9, (에스토니아)82.8, (한국)81.4, (아일랜드)75.8, (영국)73.6, (독일)65.6, (미국*)64.8[12]

그림 3 | OECD 회원국의 읽기 최소숙달수준 도달률(2025년)



주: *표시 국가(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미국)는 PISA 표본 기준 미충족으로 해석에 주의
자료: OECD, 「PISA 2025」 및 StatLink(Figure I.2.11)

그림 4 | OECD 회원국의 수학 최소숙달수준 도달률(2025년)



주: *표시 국가(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미국)는 PISA 표본 기준 미충족으로 해석에 주의
자료: OECD, 「PISA 2025」 및 StatLink(Figure I.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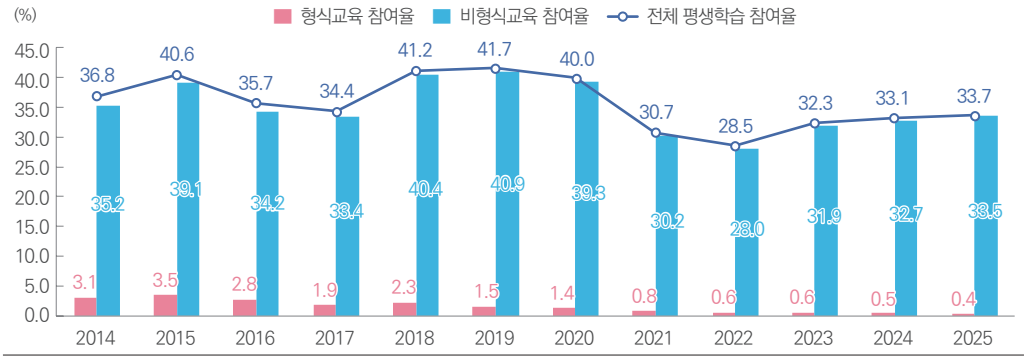
[12] *표시 국가는 PISA 표본 기준 미충족으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

나. 평생학습 참여율

➲ 평생학습 참여율[13]은 2025년 33.7%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2025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33.7%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1.7%)보다 8.0%p 낮은 수준
  -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 ('17년)34.4→('19년)41.7→('22년)28.5→('24년)33.1→('25년)33.7
  - 형식교육 참여율(%): ('17년)1.9→('19년)1.5→('22년)0.6→('24년)0.5→('25년)0.4
  - 비형식교육 참여율(%): ('17년)33.4→('19년)40.9→('22년)28.0→('24년)32.7→('25년)33.5

그림 5 | 학습 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2014~2025년)



주: 2016년까지는 만 25~64세, 2017년부터는 만 25~79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까지는 전년도 7월~조사연도 6월, 2021년부터는 전년도 1~12월을 조사 기준기간으로 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및 「2025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 우리나라 취업자의 비형식교육·훈련 참여율은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연령대와 관계없이 OECD 평균을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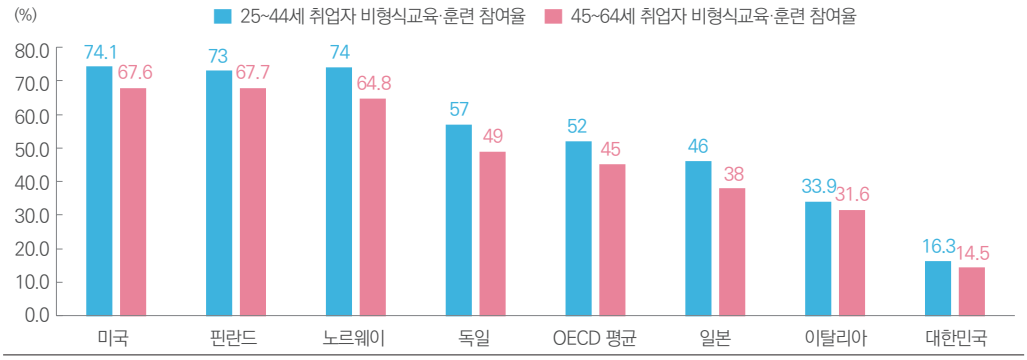
- 2023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비형식교육·훈련 참여율은 25~44세 16.3%, 45~64세 14.5%로 OECD 평균(각각 52%, 45%)보다 크게 낮은 수준
  - 25~44세 취업자의 비형식교육·훈련 참여율(%): (미국)74.1, (핀란드)73, (OECD 평균)52, (일본)46, (이탈리아)33.9, (대한민국)16.3
  - 45~64세 취업자의 비형식교육·훈련 참여율(%): (핀란드)67.7, (미국)67.6, (OECD 평균)45, (일본)38, (이탈리아)31.6, (대한민국)14.5

[13]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SDG 4.3.1)로, 우리나라는 만 25~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형식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등 공식적인 학력 인정 제도에 따라 학점·학위·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비형식교육은 공식적인 학력·학위 취득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직무연수, 학원 수강, 평생학습관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함.

• OECD 국가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형식교육·훈련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두 연령대 모두 참여율이 낮고 연령별 차이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

- 우리나라는 두 연령대 모두 OECD 국제비교 대상 30개국 중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

그림 6 | OECD 주요국 취업자의 연령대별 비형식교육·훈련 참여율(2023년)



주: OECD 평균은 조사자료가 제공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산출한 값임. 국가별 참여율 중 소수 첫째 자리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값은 OECD 공표 정수에 따라 근삿값으로 표시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6」, OECD Education GPS.

[Box 3] UNESCO「세계교육현황보고서 2026」

「세계교육현황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 Report)」는 '양질의 교육 보장(SDG4)'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연례보고서

- 2026년 보고서는 SDG 달성 시한인 2030년을 앞두고 교육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Countdown to 2030' 3부작 중 첫 번째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 참여와 이수율이 개선되었으나, 2015년 이후 교육 접근성 확대 속도가 둔화되어 2030년까지 보편적 교육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24년 전 세계 초·중등교육 재학생 수는 약 14억명으로 2000년 대비 3억 2,700만명(30%) 증가하였으나, 학교 밖 아동·청소년·청년은 2024년 2억 7,300만명으로 전 세계 학령인구 약 6명 중 1명에 해당
  - 학교 밖 인구는 2000~2015년 33%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최근 7년 연속 증가세
- 교육단계별 이수율은 2000~2024년 초등교육 77%→88%, 전기중등교육 60%→78%, 후기중등교육 37%→61%로 개선
  - 현재의 개선 속도가 유지될 경우 세계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이 95%에 도달하는 시점은 2105년으로 추정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지역 등에 따른 교육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재정의 형평성 확보가 주요 과제

- 지난 25년간 교육의 성별 격차는 완화되었으나, 소득 및 지역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존재
- UNESCO는 각국 교육재정의 형평성 지향 정도를 평가하는 신규 지수를 개발하여 재원 배분 정책의 적용 범위와 지원 규모 등을 분석
  - 형평성을 고려한 교육재정체계가 가장 높은 단계(Advanced)에 해당하는 국가는 전체의 약 8%에 불과하고, 제도 정착 단계(Established) 39%, 도입·확대 단계(Emerging) 33%, 초기 단계(Latent) 약 20%로 분류

한국은 유아교육 참여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소개되며, 유아교육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배분체계가 교육 접근성 확대 및 지역 간 재정여건 차이를 고려한 정책 사례로 언급됨

-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아동의 교육 참여율은 95%를 상회하며, 민간 유아교육기관 이용비용 지원 등이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소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재원 배분에서는 학생 수, 교원 수, 학교시설, 지방재정 여건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

CHAPTER
02 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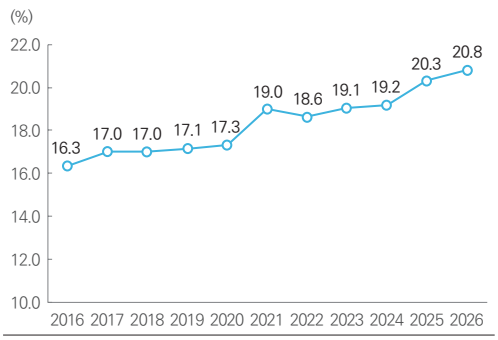
가. 거버넌스[14][15]

➲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6년 기준 20.8%,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6년 기준 20.8%로 2016년(16.3%) 대비 4.5%p 상승하였으나, G7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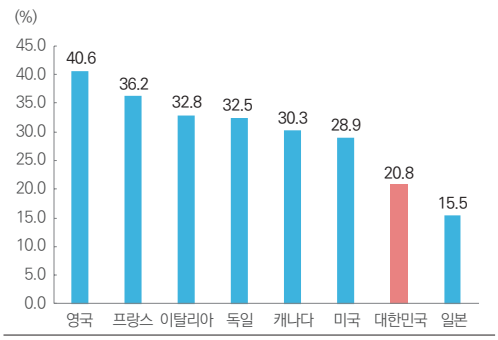
- 여성 국회의원 비율(%): ('16년)16.3 → ('20년)17.3 → ('24년)19.2 → ('26년)20.8
- G7 여성 국회의원 비율(%): (영국)40.6, (프랑스)36.2, (이탈리아)32.8, (독일)32.5, (캐나다)30.3, (미국)28.9, (대한민국)20.8, (일본)15.5

그림 7 |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16~2026년)



자료: IPU

그림 8 | G7 및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26년)



자료: IPU

➲ 2025년 관리직 여성 국가공무원(4급 이상) 비율은 28.2%, 지방공무원(5급 이상) 비율은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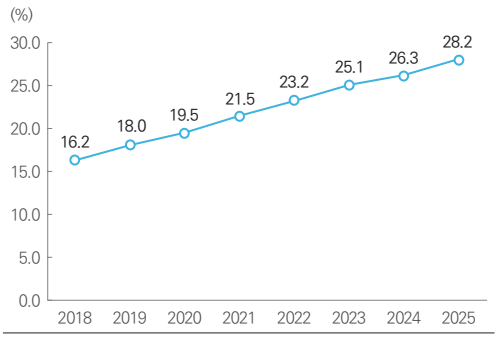
• 2018년 대비 관리직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은 12.0%p(1.7배), 지방공무원 비율은 23.2%p(2.5배) 상승

- 관리직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 ('18년)16.2→('20년)19.5→('23년)25.1→('25년)28.2
- 관리직 여성 지방공무원 비율(%): ('18년)15.6→('20년)20.8→('23년)30.8→('25년)38.8

[14] 단원제 의회 또는 양원제 의회 하원의 여성 의석 비율(SDG 5.5.1).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6년 1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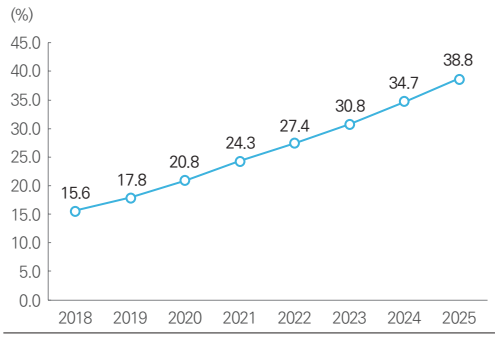
[15]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SDG 5.5.2)로, 본 보고서에서는 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살펴봄

그림 9 | 관리직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2018~2025년)



주: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외무·별정직 공무원 대상
자료: 인사혁신처, 「2026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그림 10 | 관리직 여성 지방공무원 비율(2018~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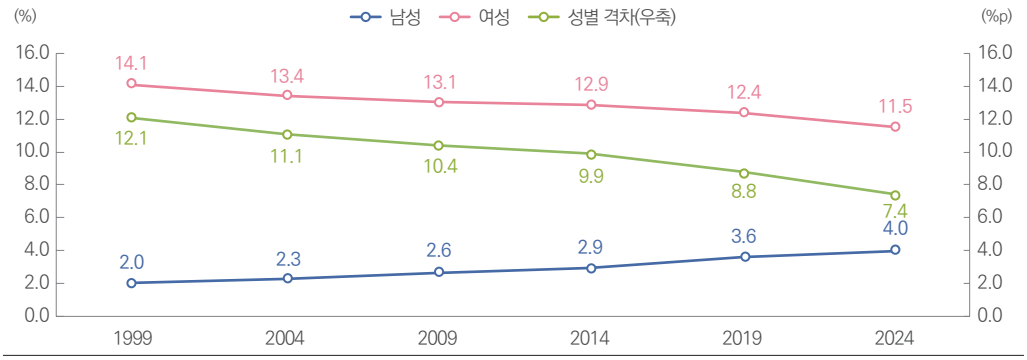
주: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별정직 대상
자료: 인사혁신처, 「2026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나. 돌봄

➲ 여성의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16]에 소요된 시간 비율은 감소하고 남성의 비율은 증가하면서 성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

- 2024년 여성의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은 11.5%로 남성(4.0%)보다 7.4%p 높음
  - 여성의 무급 가사·돌봄노동 시간 비율은 1999년 14.1%에서 2024년 11.5%로 2.6%p 감소한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2.0%에서 4.0%로 2.0%p 증가
  - 이에 따라 남녀 간 시간 비율 격차는 1999년 12.1%p에서 2024년 7.4%p로 4.7%p 축소

그림 11 |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추이(1999~2024년)



주: 1) 시간 비율은 하루 중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 소요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눈 비율이며, 성별 격차는 여성 비율에서 남성 비율을 차감하여 산출
2) 5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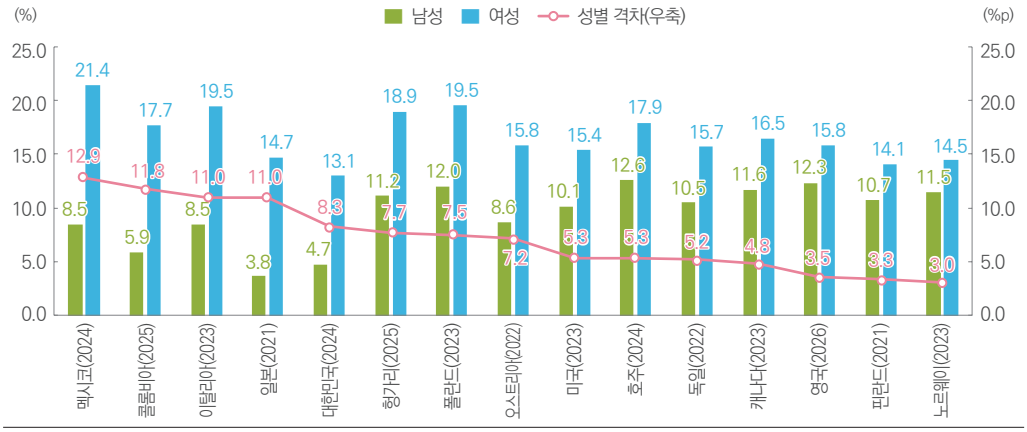
[16] 하루 24시간 중 무급 가사·돌봄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비중을 의미하며,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5년 단위로 파악(SDG 5.4.1).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무급 가사·돌봄노동 시간 비율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며, 상대적인 성별 불균형이 큰 편

-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15개국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무급 가사·돌봄노동 시간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 주요국의 성별 시간 비율 격차(%p): (멕시코)12.9, (콜롬비아)11.8, (이탈리아)11.0, (일본)11.0, (대한민국)8.3, (독일)5.2, (영국)3.5, (핀란드)3.3, (노르웨이)3.0

- 여성과 남성의 시간 비율을 배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약 2.8배로 일본(3.9배), 콜롬비아(3.0배)보다는 낮지만 독일(1.5배), 호주(1.4배), 노르웨이(1.3배)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그림 12 | OECD 주요국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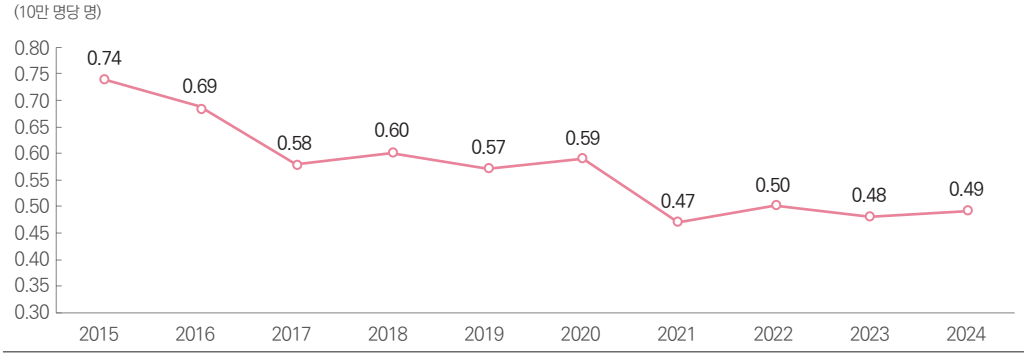
주: 15세 이상 인구, 전국 기준으로 남녀 모두의 자료가 확인되는 OECD 국가 중 2021년 이후 최신 관측치가 있는 15개국을 비교
자료: UN SDG Global Database

가. 고의살인 피해자 수

인구 10만명당 고의살인 피해자 수[17]는 2024년 0.49명으로, 2015년(0.74명)보다 감소

- 2000년 0.79명이었던 고의살인 피해자 수는 2009년 1.10명으로 높아졌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
  - 인구 10만명당 고의살인 피해자 수(명): ('15년) 0.74 → ('20년) 0.59 → ('22년) 0.50 → ('24년) 0.49

그림 13 | 인구 10만명당 고의살인 피해자 수 추이(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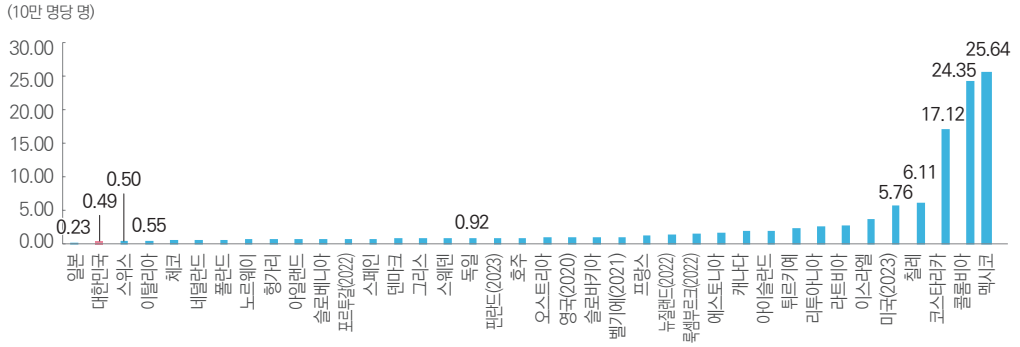
자료: UNODC

우리나라의 고의살인 피해자 수는 OECD 38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2024년 기준 한국은 10만명당 0.49명으로 일본(0.23명)보다는 높지만 스위스(0.50명), 이탈리아(0.55명), 독일(0.92명)보다 낮음
- 반면 미국은 5.76명(2023년), 칠레 6.11명, 코스타리카 17.12명, 콜롬비아 24.35명, 멕시코 25.64명으로 높은 수준

[17] SDG 16.1.1

그림 14 |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고의살인 피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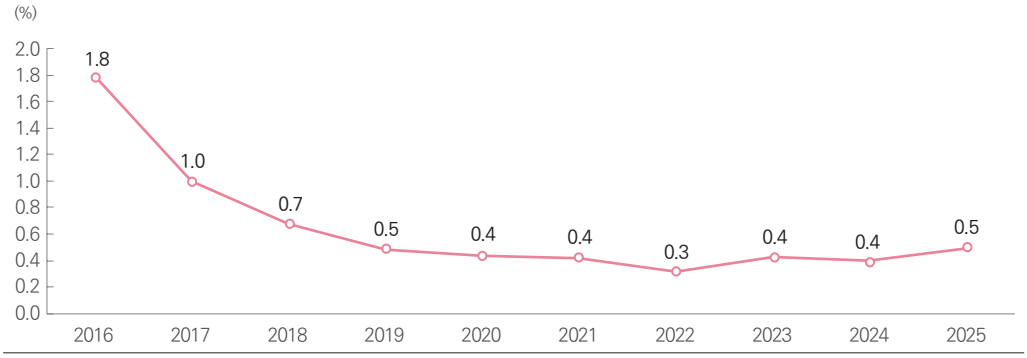
주: 국가별 최근 이용 가능한 연도 기준이며, 2024년 이외 자료를 사용한 국가는 기준연도를 표시함.
자료: UNODC

나. 부패

➲ 우리나라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 경험률[18]은 2025년 0.49%

- 공공기관 부패 경험률은 2016년 1.8%에서 2017년 1.0%로 낮아졌으며, 2018년 0.7%에서 2021년 0.4%까지 감소
  - 2022년 이후에는 2022년 0.3%, 2023년 0.4%, 2024년 0.4%, 2025년 0.5%로 나타나 최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림 15 |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 경험률 추이(2016~2025년)



주: 2022년부터 요구·제공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채용 등 사적 이익, 거래 특혜·정보 제공, 운동부 불법 찬조금 등 부패 유형이 추가되었으며, 응답건수 기준에서 응답자 수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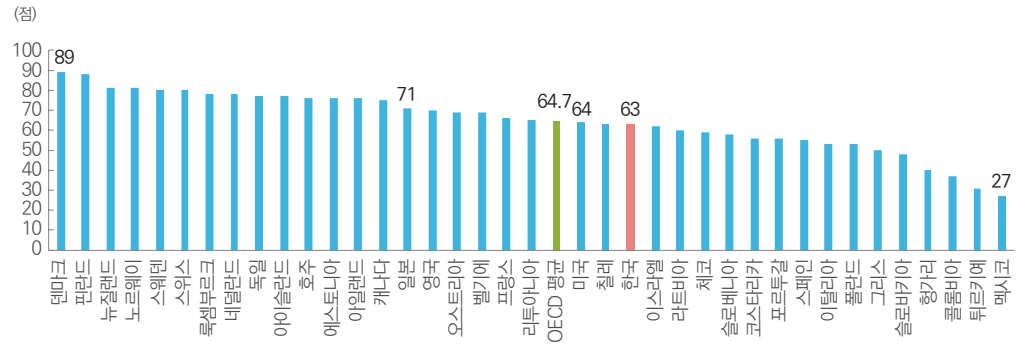
[18]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및 담당자와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국민 중 부패 경험을 측정(SDG 16.5.1)

2025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63점으로 OECD 38개국 중 22위

- 2025년 우리나라 CPI는 63점으로 OECD 38개국 중 22위이며, OECD 평균(64.7점)보다 낮은 수준

  - 국가별 CPI(점): (덴마크)89, (독일)77, (캐나다)75, (일본)71, (영국)70, (프랑스)66, (OECD 평균)64.7, (미국)64, (대한민국)63, (이탈리아)53, (멕시코)27

그림 16 | OECD 국가별 부패인식지수(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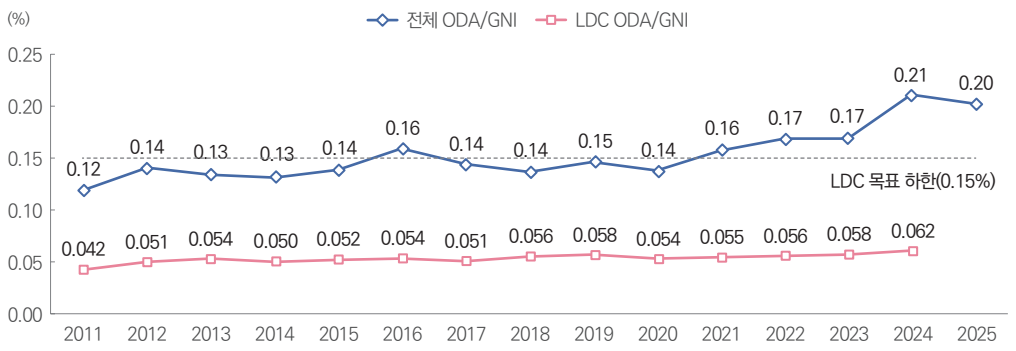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38개국 단순평균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5」

GNI 대비 ODA 비율[19]은 2025년 0.20%로 UN 목표(0.7%)에 미달하며, 최저개발국(LDC) 대상 비율도 2024년 0.06%로 목표 하한(0.15%)에 미달

- ODA/GNI 비율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
  - ODA/GNI 비율 (%): ('11년)0.12→('16년)0.16→('21년)0.16→('24년)0.21→('25년)0.20
  - 2025년 ODA 규모는 약 39억 달러(잠정)로, 다자원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실질 기준 2.3% 감소
- 최저개발국(LDC) 대상 ODA/GNI 비율은 2024년 0.06%로, 국제 목표 하한(0.15%)의 40% 수준
  - GNI 대비 LDC ODA 비율(%): ('11년)0.04→('18년)0.06→('24년)0.06

그림 17 | ODA/GNI 비율 및 LDC 대상 ODA/GNI 비율 추이(2011~2025년)



주: 1) 전체 ODA는 2017년까지 순지출액, 2018년부터 증여등가액 기준이며, LDC 대상 ODA는 배분된 다자원조를 포함한 순지출액 기준임
2) 2025년 전체 ODA는 잠정치이며, LDC 대상 비율은 2024년까지 공표됨
자료: OECD DAC1; UN SDG Global Database

2025년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0.20%)은 DAC 전체(0.26%)보다 낮으며, LDC 대상 ODA/GNI 비율(2024년 0.06%)도 주요 공여국 대비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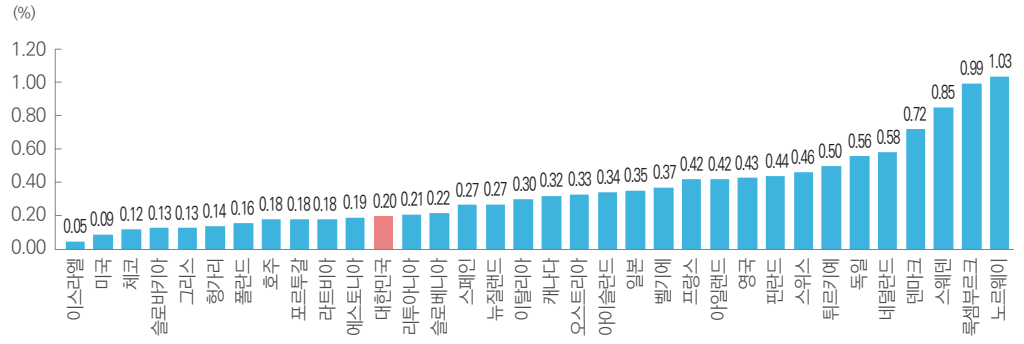
- 2025년 ODA/GNI 비율이 UN 목표(0.7%)를 달성한 국가는 노르웨이·룩셈부르크·스웨덴·덴마크 등 4개국
  - 주요국 ODA/GNI 비율(%): (노르웨이)1.03, (스웨덴)0.85, (독일)0.56, (영국)0.43, (일본)0.35, (한국)0.20, (미국)0.09

[19] 공여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전체 ODA와 최저개발국 대상 ODA로 구분하여 측정(SDG 17.2.1)

• **2025년 주요 공여국의 ODA 축소로 DAC 전체의 ODA/GNI 비율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축소**

- DAC 전체 비율은 2024년 0.34%에서 2025년 0.26%로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0.21%에서 0.20%로 하락
- 우리나라의 DAC 회원국 내 순위는 2024년 25위에서 2025년 22위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주요 공여국의 원조 축소에 따른 상대적 순위 상승

그림 18 | OECD 국가별 ODA/GNI 비율(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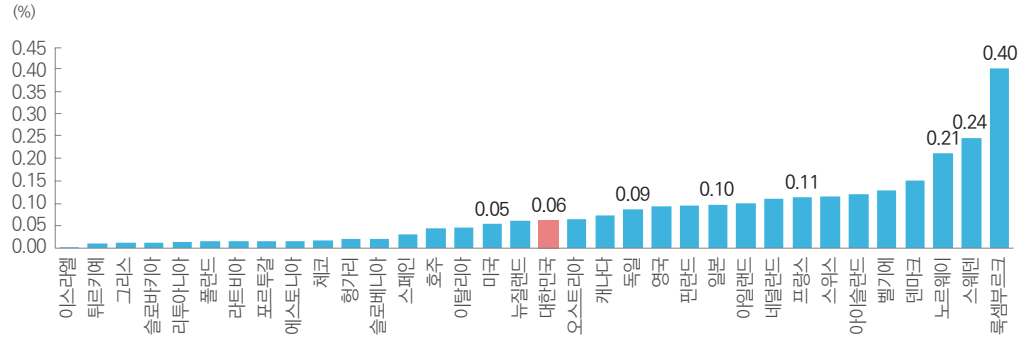


주: 증여등가액 기준이며, 2025년 수치는 잠정치임. 그림에는 자료가 제공되는 OECD 34개국을 제시함
자료: OECD DAC1

• **2024년 LDC ODA/GNI 비율이 국제 목표 하한(0.15%) 이상인 국가는 룩셈부르크·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 4개국**

- 주요국 LDC ODA/GNI 비율(%): (룩셈부르크)0.40, (스웨덴)0.24, (노르웨이)0.21, (프랑스)0.11, (일본)0.10, (독일)0.09, (한국)0.06, (미국)0.05

그림 19 | OECD 국가별 LDC ODA/GNI 비율(2024년)



주: 배분된 다자원조를 포함한 순지출액 기준이며, 전체 ODA(그림 18)와 측정 기준 및 기준연도가 상이함
자료: UN SDG Global Database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Ⅳ

자율주행 기술과 한국의 고용시장

"기술 동향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Ⅳ 기술 동향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자동화, 로봇 및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은 산업 구조와 생산 방식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 변화는 직무 구성과 숙련 수요, 고용 형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두됨.
이에 대응하여 'Ⅳ. 기술동향'에서는 향후 고용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기술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해당 기술의 발전 단계와 활용 방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조기경보(Early Signal)'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보고서의 특징

- (핵심 기술 동향) 자동화, 서비스 로봇, 생성형 AI 등 고용 환경 변화와 관련 있는 주요 기술의 발전 단계와 산업별 도입 현황 소개
- (정량·정성 통계) 국제 비교 통계, 기술·산업 관련 기초 지표와 함께 전문가 견해 및 주요 사례를 제시하여 기술 발전의 현 주소를 이해하는 동향 정보를 제공
- (기회와 위험의 균형)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논의보다는, 기존 직무의 성격 변화와 새로운 직무의 생성 가능성을 포함하여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균형 있게 제시

향후 기대효과

- '기술 동향'은 중·장기 고용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의 등장을 점검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연간 '기술 동향' 주제			
제5호(2월)	제6호(5월)	제7호(8월)	제8호(11월)
로봇	AI	자동화	자율주행

※「기술 동향」 기획·자문: 허은녕 교수
(자원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공학전문대학원)

자율주행 기술과 한국의 고용시장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 **김성우** 교수

01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현황

가.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단계별 특징

➲ **자율주행은 운전자 보조 기능의 고도화와 함께 특정 운행조건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무인 운송서비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자율주행 수준은 운전 과업 수행 주체와 운전자 개입 요구에 따라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다름
  - 대표적인 소비자용 기능인 Tesla의 FSD(Full Self Driving)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을 전제로 하는 레벨2 운전자 보조기능으로, 무인 운행을 허용하는 레벨4와 구별됨
  - 레벨4는 정해진 운행설계영역(Operational Design Domain, ODD[20])에서 시스템이 운전과 비상 대응을 담당하며, 운전자의 상시 감독 없이도 최소 위험상태에 도달하도록 설계

표 1 | 자율주행 수준별 운전 책임

구분	자동화 기능	운전자의 역할·책임
레벨0	운전 자동화 없음	운전자가 모든 운전 과업 수행
레벨1	조향 또는 가감속 중 하나를 지원	운전자가 주변환경 감시 및 개입
레벨2	조향과 가감속 동시에 지원	운전자가 상시 감독 필요시 즉시 개입
레벨3	정해진 조건에서 조건부 자동화	시스템 요청 시 운전자가 운전 수행
레벨4	정해진 운행설계영역 내 무인운행 가능	운전자 상시 감독 불필요 시스템이 위험 대응
레벨5	모든 조건에서의 자율주행	사람의 운전 불필요

자료: SAE International J3016(주행 자동화 수준 정의)

[20] 운행 가능한 도로·지역·속도·기상 등의 조건을 의미

•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다른 도로 이용자의 움직임을 예측한 뒤, 주행경로를 계획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결합함
  - 카메라는 신호등·차선·표지판 등 시각정보를, 라이다(LIDAR)는 주변 물체의 3차원 위치를, 레이더(RADAR)는 물체의 상대속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서로 다른 센서 정보를 결합하여 인식의 한계를 보완함

그림 1 |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본 정보처리 흐름



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동향

➲ **자율주행 기술은 기능을 단계별로 설계하는 방식에 더해, 대규모 주행자료를 활용하여 센서 입력과 주행결정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엔드투엔드(E2E) 방식 등으로 발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모듈형 개발은 주변 객체 인식 – 이동예측 – 경로계획을 단계별로 설계하는 반면, E2E 학습은 센서 입력에서 주행 궤적을 생성하는 과정 일부를 통합적으로 학습

• 도로 공사·비정형 교차로 등 드물게 나타나는 상황(Long Tail)에 대응하기 위해 실도로 주행과 시뮬레이션 등을 병행

➲ **자동차 경쟁력의 평가 기준이 제조 품질·가격에 소프트웨어와 운전 자동화 역량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무인 서비스에서는 실제 운행·관제·고객대응 능력까지 요구됨**

• 소비자용 차량에서도 운전 자동화 수준이 구매 선택의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Tesla는 2026년 7월 미국산 모델 3와 모델 Y에 감독형 FSD를 국내에 배포(레벨2)

• 자동차 제조업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운영기업 사이의 역할과 부가가치 배분이 재편될 전망

02 국내외 상용화 동향

가. 해외 자율주행 기술

➲ 미·중 주요 기업은 무인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며 대규모 실도로 주행과 서비스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미국 Waymo는 2026년 6월 말 기준 운전자가 없는 승객 탑승 운행거리(rider-only miles)를 누적 2억 7,130만 마일(약 4억 3,700만km)로 발표[21]
  - Waymo는 2026년 2월 미국 6개 대도시권에서 주당 40만 건 이상 탑승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라스베이거스 등 신규 지역에서 승객 운행을 시작함
  - 2026년 공개한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은 카메라·라이다·레이더를 함께 활용하면서 센서 구성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기상조건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됨

- 중국 Baidu의 Apollo Go는 2026년 8월 발표에서 자율주행차의 누적 주행거리 3억 5,000만 km 이상, 이 중 완전무인 운행거리 2억 4,000만 km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힘[22]
  - Apollo Go는 총 28개 도시에 진출했으며, 두바이·홍콩·런던 등 해외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음
  - 완전무인 운행은 2026년 1분기 약 320만회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에는 규제 영향으로 약 100만회로 줄어, 제도적 여건이 상용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 미국의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체계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상용화 범위는 기업별 안전성 검증과 사업허가 요건 등에 따라 다름

- 캘리포니아는 안전운전자 동승 시험 – 무인 시험 – 배치를 구분하고, 텍사스는 상업용 무인 자율주행차 운영허가와 법정 안전요건을 적용

➲ 싱가포르는 자율주행을 대중교통의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보완하는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풍골(Punggol) 지역에서는 안전요원 동승하에 2026년 4월 일부 노선에서 일반인 탑승을 개시하고, 7월에는 정해진 승하차 지점 간 호출형 운행도 시범 도입

[21] Waymo, “Safety Impact”, 2026년 6월 말 누적치. 승객 탑승 무인거리(rider-only miles) 기준. (https://waymo.com/safety/impact/)

[22] Baidu Inc., “Baidu Announces Second Quarter 2026 Results”, “Q2 2026 Baidu Earnings Conference Call”, 2026.8.18.

나. 국내 자율주행 기술

➲ 국내에서는 안전요원·시험운전자가 동승하는 자율주행택시·순환버스 등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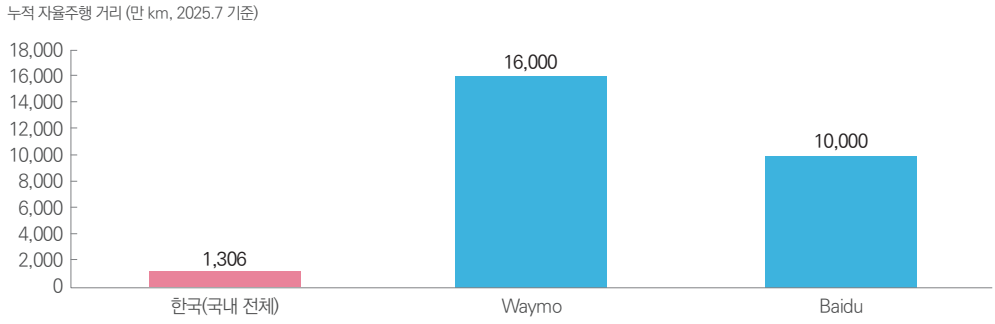
- 국내 사례의 정책적 목적은 심야 교통 공백 해소, 기존 대중교통 배차 보완, 교통약자 이동지원, 도시 단위 기술 검증 등으로 구분됨

표 2 | 자율주행 활용 대상에 따른 이동 문제와 국내 사례

적용 대상	해결하려는 문제	자율주행의 역할	국내 사례
대도시 생활권	주거지-역-직장 연결 불편	퍼스트·라스트 마일 연결	안양 혼잡구간 셔틀 판교 노선버스+DRT
지방 인구감소지역	운전인력 확보 노선유지의 어려움	기본 이동 서비스 유지	경남 하동 읍내 순환 자율주행 버스
고령자·교통약자	운전 중단에 따른 생활 반경 축소	생활시설·의료시설 접근 지원	서울 양천구 교통약자 셔틀 충북 혁신도시 병원 연계 노선
심야·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공급 부족	시간대 공백 보완	충남 내포 순환버스 서울 자율주행 택시

- 국토교통부의 2026년 발표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국내 자율주행차의 누적 실증거리는 약 1,306만km[23]
  -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실증거리는 해외 주요 기업의 1/12 ~ 1/8 수준

그림 2 | 자율주행 누적거리 비교



-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를 2026년 4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운행 차량을 7대에서 19대로 확대함[24]

[23]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 2026.1.21.

[24] 서울특별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7→19대로 확대…대기시간↓」, 2026.8.19.

- 2024년 9월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누적 탑승은 1만 5,14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운영 차량에는 시험운전자 1명이 상시 동승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운전함

• **충청남도는 2026년 10월부터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순환버스 '자율 1004번'을 무료로 운행하여 기존 버스 노선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음**[25]

- 12인승 차량이 15개 정류장을 평일 하루 4회 순환하며, 보호구역·위험지역·악천후 등에서는 동승한 시험운전자가 수동 운전으로 전환

그림 3 | 서울 심야 자율주행택시



자료: 서울특별시

그림 4 | 충남 자율주행버스 '자율 1004번'



자료: 충청남도

• **정부는 2026년 광주 전역 약 500.97㎢를 도시 단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2026~2028년 국비 610억원으로 자율주행 전용 차량 200대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26]

- 광주는 2026년 1월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선정되고 4월 국내 최초의 도시 단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
- 2026년 11월 차량 투입 시작, 2027년 실증구역 확대, 2027년 말~2028년 초 레벨4 무인 운행을 목표로 함
- 임시운행허가·시범운행지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증에서 상용 운송으로 이어지는 허가·책임·보험·서비스 확대의 세부 경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자율주행 기업은 소비자용 운전자 보조기능과 레벨4 운송서비스를 병행 개발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 기반을 자율주행 기술과 연결하는 과제에 직면**

• **현대자동차는 광주 실증도시에서 소비자용 레벨2+와 사업용 레벨4를 함께 개발하고**[27], 미국 자회사 Motional은 202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Uber와 로보택시 운행(안전요원 탑승)을 시작하여 연말 완전 무인운행을 목표로 함[28]

[25]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버스' 무료 운행」, 2026.10.8.

[26] 국토교통부, 「"미래가 묻고, 광주가 답한다"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2026.5.13. 다만 예산·차량 수 및 단계별 투입 일정은 향후 추진 과정에 따라 사업계획과 다를 수 있음.

[27]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민간 참여기업 선정」, 2026.4.28.

[28] Motional, "Uber and Motional Launch Robotaxi Service in Las Vegas", 2026.3.13.

- 현대자동차그룹의 2025년 판매량은 약 727만 대[29]로 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상위권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제조역량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서비스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

➲ 국내 기업의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실제 무인 운송사업의 허가·책임 배분과 실도로 운영경험 축적이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됨

-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기술기업, 운송사업자의 위험 부담과 사업전략이 다르므로 시장 초기에는 다양한 기업 유형의 실증·운영 참여가 필요**
  - AI 기술 발전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져 초기 사업은 사고 시 브랜드 평판 부담이 큰 완성차보다 중소·신생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큼

[29] 기아, 「기아, 2025년 313만 5,803대 판매」, 2026.1.5.; 현대자동차, 「2025년 경영실적 발표」, 2026.1.29.

03 자율주행 기술과 노동시장

가. 운전직 노동수요와 인구구조

➲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는 운전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여 운수업의 노동수요와 업무구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인지·판단·조작 등 운전자가 수행하던 과업 중 시스템이 담당하는 영역이 확대되면 해당 구간의 운전 인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
  - 감소 시점과 규모는 실제 무인운행이 허용되는 지역, 운행시간, 차량 보급속도 및 비용경쟁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

- 노동시장 변화는 대규모 해고보다 신규채용 축소, 퇴직자 미충원, 배차·운행시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먼저 나타날 수도 있음

➲ 운수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운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이 공급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사업용 운수종사자 82만 6,317명 중 65세 이상은 22만 8,407명(27.6%)[30]
  - 택시 운전자는 23만 7,331명 중 11만 9,362명(50.3%)이 65세 이상으로, 전체 운수종사자보다 고령화 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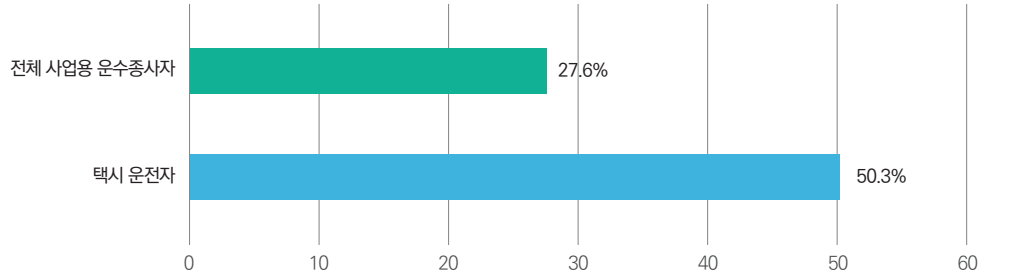
- 싱가포르도 택시 기사의 3분의 2가 60세 이상이고 버스기사 채용이 어려운 점을 자율주행 확대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31]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운전자를 구하지 못해 노선이 줄어들고 있어, 자율주행이 운전자 대체 이전에 기본 이동서비스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운전 안전 보완기술에서 운전을 맡기는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

[30] 복기왕 의원실 분석(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제출자료)

[31] Prime Minister's Office Singapore, "National Day Rally 2026".

그림 5 | 2026년 운수종사자의 65세 이상 비중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재구성

나. 편익·부담의 분포와 직무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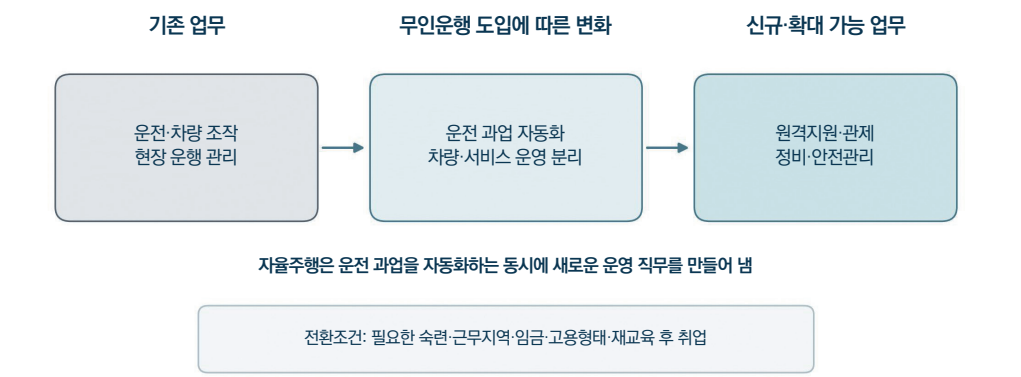
➲ **자율주행의 이동 편익은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폭넓게 분산되지만 소득·일자리 위험은 기존 운수종사자에게 집중되므로, 전체 일자리 수뿐 아니라 전환 경로를 살펴볼 필요**

- 이용자는 이동편의와 안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기존 운전직 종사자는 소득·고용의 불확실성에 먼저 직면할 가능성
-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보급률뿐 아니라 신규채용, 영업수입, 직무전환 및 고용 유지 등의 변화를 사전에 관찰할 필요

➲ **운전업무 자동화로 새로운 직무가 생기더라도 기존 운전자가 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

- 운전직과 관제·소프트웨어·정비 분야는 요구하는 숙련도, 근무지, 채용조건이 다르고, 고령 종사자 비중이 높을수록 재교육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 직무 재배치, 현장지원 등 다양한 전환 경로를 함께 검토할 필요

그림 6 | 운전업무 자동화와 직업전환 경로



➲ **싱가포르 정부는 운전자의 자율주행 전문인력 전환 등을 위해 직업전환 교육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주에게 훈련기간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발표**[32]

- 기술 확산 속도에 맞추어 교육·취업지원의 실제 성과를 점검하고, 일률적 보급 상한보다는 기존 종사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접근을 검토
  - 택시기사의 버스기사 전환 등 직무전환과 취업 연계를 결합하여 자율주행 도입과 노동시장 전환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

➲ **자율주행 운송서비스는 기존 운송시장의 소득과 사업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조정을 도입 초기부터 함께 논의할 필요**

- 국내 '타다' 서비스 사례는 새로운 이동서비스가 기존 사업권·소득 구조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해관계 조정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함

- 초기부터 운수업계·노동계·지방자치단체가 운영모델 설계에 참여할 필요
  - 기존 사업자의 참여, 직무전환 지원, 사업권 조정·보상 등의 방안을 제도적 비용·재정 부담과 함께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음

다. 도입 지연의 산업·고용 비용

➲ **국내 도입 지연은 기존 운전직의 변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개발·서비스 운영경험과 연관 산업의 미래 고용 확보에는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자율주행은 실제 도로 상황과 서비스 중단·사고 대응·원격지원 등 운영경험을 축적하며 개선되는 기술로, Waymo·Baidu 등 해외기업은 대규모 실서비스로 경험을 쌓고 있음

- 2026년 하반기 Baidu·Pony.ai·Waymo의 국내 법인 설립·협약 추진과 Baidu의 국내 합작법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33]
  - 해외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도 국내 노동시장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이 창출하는 매출뿐 아니라 국내에 귀속되는 기술·데이터·부가가치·소득·세수를 함께 점검할 필요

- 관제·안전 검증·차량 정비·사고 대응·보험·법률 처리 등 운영 노하우는 도입 이후에야 축적되고, 직접 만들고 운행해 본 젊은 인력이 산업과 운영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음
  - 고용문제를 운전직에 한정하지 않고 자동차 제조업, 부품 산업, 소프트웨어·서비스업과 앞으로 만들어질 일자리를 함께 고려할 필요

[32] Ministry of Transport Singapore, "More Options for Taxi and Private Hire Car Drivers as Singapore Prepares for the Future of Mobility", 2026.7.7.

[33] 한국경제(2026.8.24.), 이코노미스트(2026.9.13.), 딜사이트(2026.9.24.) 등 국내 진출 관련 보도.

04 시사점

자율주행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이며, 기술 도입의 편익 확보와 노동시장 변화 관리를 함께 설계할 필요

-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동서비스부터 확대하면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국내에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 전환을 함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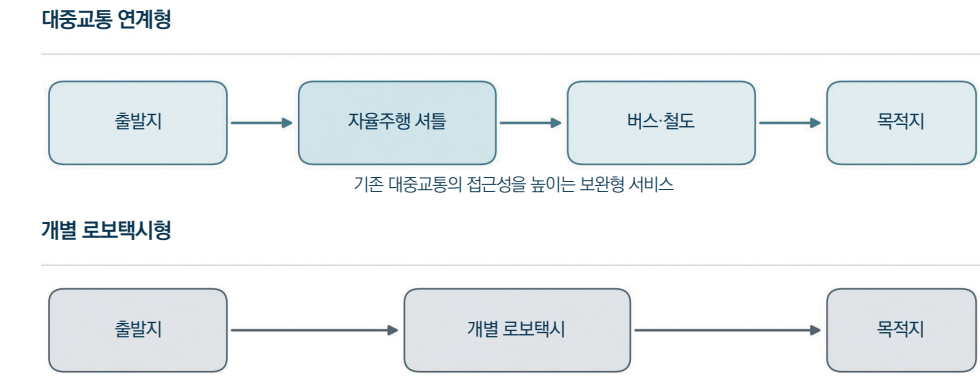
공익적 이동수요와 관리 가능한 운행설계영역이 확인되는 곳부터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

- 운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대중교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이동수단의 공급 공백을 확인하고, 도로 환경·기상조건·원격지원·정비·비상대응 체계를 함께 고려해 도입 대상을 선정
  - 농어촌 읍내와 의료시설·교통거점을 연결하는 노선, 산업단지 교대시간 통근 노선, 대도시 철도역과 주거지 사이 연결구간, 심야·새벽 시간대 등이 검토 대상

대중교통 연계형 서비스와 개별 로보택시는 기대효과가 다르므로, 기존 버스·철도 이용을 보완하는지 구분하여 검증할 필요

- 철도역·버스정류장과의 환승을 지원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으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개별 로보택시는 기존 버스·철도와 경쟁할 가능성
- 운행조건을 비교적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구간에서 시작하더라도 광주와 같은 복잡한 도시환경의 실증을 병행해 적용 범위와 안전 대응능력을 검증할 필요

그림 7 | 운영모델별 대중교통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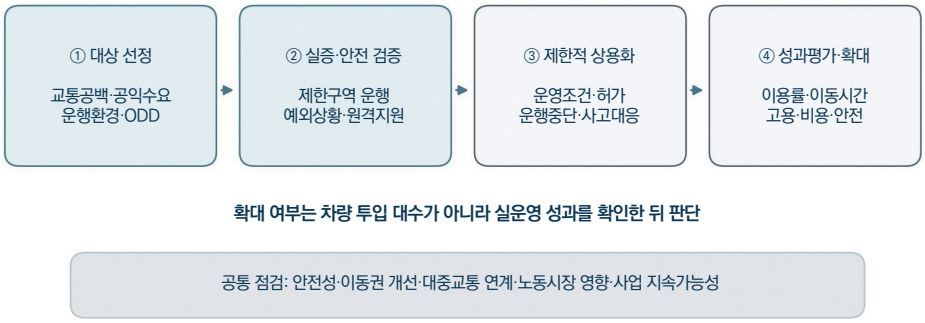


현행 실증·허가제도를 바탕으로 실증에서 상용 운송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

- 국내에는 임시운행허가와 시범운행지구 규제 특례가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실증 기반을 상용 운송으로 연결하는 진입요건·확대조건·제한규칙과 안전검증·책임·보험 조건 등을 구체화하는 접근이 중요
  - 상용화 제도의 방식은 미국 텍사스(법정 요건 충족 시 운영 허가)와 캘리포니아(단계별 허가)처럼 다를 수 있으나,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운행을 시작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 안전 문제 발생 시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

- 이러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기업이 차량 개발과 운영 시설에 투자하고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그림 8 | 자율주행 실증에서 상용화까지 단계별 평가 경로



기존 운수 종사자·사업자의 전환 과정 참여와 이해관계 조정을 병행할 필요

- 기존 운수 사업자가 차량 운영·고객 대응 업무에 참여하고, 운전자는 관제·안전지원·정비 분야로 전환하는 경로를 함께 검토
  - 싱가포르처럼 직무전환 교육과 임금 지원, 실제 취업 연계를 결합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 직무전환 지원은 실제 취업 여부와 전환 후 임금·고용 유지율, 기존 종사자의 소득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

도입 차량 수보다 실제 안전·이동·고용·산업 성과에 근거하여 재정지원과 사업평가를 설계할 필요

- 공공재정은 차량 보급이나 일회성 시연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초기에는 안전성과 운행 능력을, 이후에는 이용률·운영 비용·안전사고·원격 개입 빈도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대 가능성을 평가

- 민간 수익성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은 이용객당 비용과 함께 이동시간·대기시간 개선, 고령자·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등 주민 편익을 함께 고려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의 실제 무인 운행 실적과 기술개선·운영경험,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 계획뿐 아니라 달성 실적을 평가할 필요

- 자율주행 정책의 성과는 도입 차량 수가 아니라 어떤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로 평가할 필요

표 3 | 자율주행 도입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예시

평가 영역	주요 지표	검토 사항
안전성	주행거리 대비 사고율 운행중단·원격개입 빈도	ODD 및 사고 정의 통일 충분한 관측 기간 확보
이동권	교통취약지역 이용률 고령자·교통약자 이용률	기존에 충족되지 못한 이동 수요 개선 여부
대중교통 연계	환승 이용 비중 기존 버스·철도 이용 변화	신규 통행량 증가와 기존 수요 대체 구분
노동시장	기존 종사자의 소득 변화 전환 후 취업·고용 유지율 국내 인력 채용	대상 집단 및 비교 시점 일치
산업역량	실제 무인운행 실적 국내 기술개선·사업화 성과	차량투입량과 국내 부가가치 구분
재정효율	이용객당 총운영비·지원액 기존 교통수단 대비 비용	공익적 서비스와 민간 상업서비스 별도 평가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V

혼인과 출생의 동반 반등: 관계와 지속 가능성

"이슈 분석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V 이슈 분석

혼인과 출생의 동반 반등: 관계와 지속 가능성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김상용** 경제분석관(02-6788-4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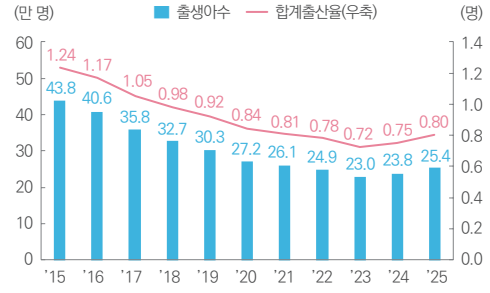
01 검토 배경

➲ 합계출산율은 2024년부터, 혼인 건수는 2023년부터 반등하여 증가 추세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장기간 하락하다가 2024년부터 반등한 모습
  -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하락한 이후,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하였으며, 2025년에도 0.80명으로 상승
  - 2026년 8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는 19.4만명으로 2025년 8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16.9만명) 대비 14.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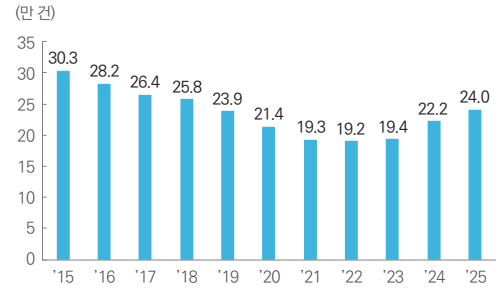
- 혼인 건수는 합계출산율 반등 1년 전인 2023년부터 반등하여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혼인 건수는 2015년 30.3만건에서 2022년 19.2만건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 19.4만건으로 반등하였으며, 2025년에는 24.0만건으로 증가
  - 2026년 8월까지의 누적 혼인 건수는 16.6만건으로 2025년 8월까지의 누적 혼인 건수(15.8만건) 대비 5.2% 증가

그림 1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 | 혼인 건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혼인·출산간 관계와 최근 혼인 증가의 성격을 실증분석하고, 반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혼인 건수는 출생의 선행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혼인과 출생 간의 시차와 관계의 강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
- 혼인 증가의 출생아 수 기여도와 코로나19 이후 혼인 회복 및 인식 변화를 분석하여 출생아 수 반등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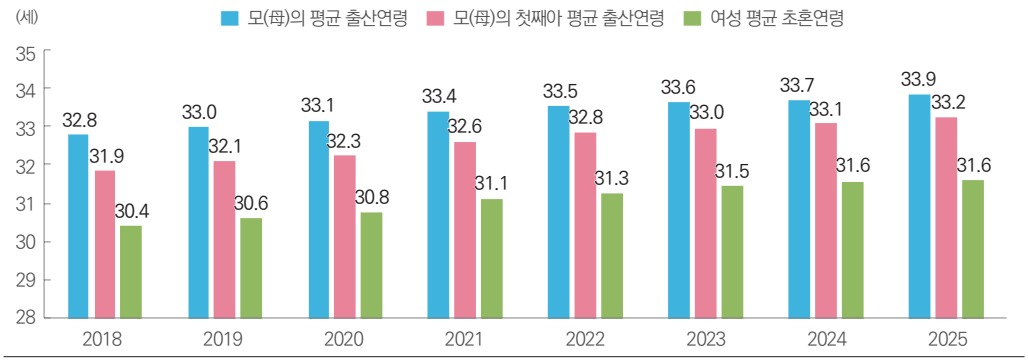
02 혼인과 출생의 관계 및 혼인 증가의 기여도

가. 혼인과 출생 간 시차 및 상관관계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과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에는 1.5년 전후의 기간 차이 존재

- 2025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1.6세이며,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3.2세로 혼인과 출생 사이 1.6년의 시차가 존재
  -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의 차이는 최근 5년간 안정적으로 1.5세 전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출생아에 대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과 2.2세 전후의 차이가 존재
- 평균 연령 간 차이만으로 혼인과 출생 간의 실제 시차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혼인 후 출생까지의 기간별 출생아 수 분포도 함께 살펴볼 필요
  - 일부 장기간 사례가 평균을 높일 수 있으므로, 평균만으로 혼인과 출생 간 일반적인 시차를 판단하는 데 한계

그림 3 | 여성의 출산 및 혼인 연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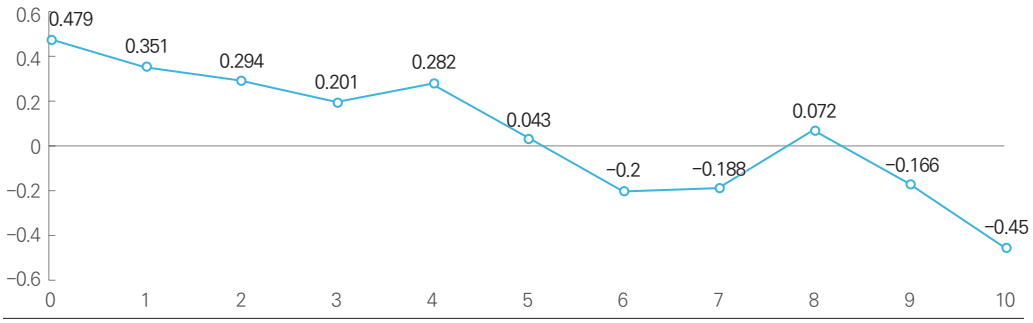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증가율 간 상관관계는 동시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혼인이 출생의 동행지표적 특성을 보임

-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시차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981~2025년 연간 자료를 활용하고, 혼인 건수의 시차를 0~10년으로 설정하여 상관계수를 산출
-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동시점에서 0.479로 가장 높았으며, 혼인 건수가 1년 및 2년 선행하는 경우 각각 0.351, 0.294로 낮아지는 모습
  - 혼인 건수는 출생아 수와 밀접한 동행 관계를 보이며, 출생아 수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그림 4 |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 증가율 상관계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에서도 혼인 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출생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인구동향조사」의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에서도 결혼 후 1년 미만의 부부가 낳은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2025년 출생아 수 중 18.4%가 1년 미만의 부부에서 태어났으며, 결혼 기간이 증가할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모습

-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 통계는 혼인신고 시점이 아닌 실제 결혼생활을 기준으로 집계하지만, 여전히 결혼생활 1년 미만의 출생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출생을 하는 부부가 많으며,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집계할 시, 1년 이내 출생하는 부부의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음

표 1 | 결혼 생활 기간별 출생아 수 분포

(단위 : 명(%))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30,028	238,317	254,341
1년 미만	40,271 (17.5%)	41,801 (17.5%)	46,835 (18.4%)
1~2년 미만	34,433 (15.0%)	37,336 (15.7%)	40,583 (16.0%)
2~3년 미만	31,942 (13.9%)	33,940 (14.2%)	37,342 (14.7%)
3~4년 미만	29,365 (12.8%)	28,204 (11.8%)	29,728 (11.7%)
4~5년 미만	24,467 (10.6%)	24,320 (10.2%)	23,486 (9.2%)
5~6년 미만	18,699 (8.1%)	19,077 (8.0%)	19,680 (7.7%)
6~7년 미만	13,367 (5.8%)	13,619 (5.7%)	14,579 (5.7%)
7년 이상	28,001 (12.2%)	27,882 (11.7%)	30,053 (11.8%)
미상	9,483 (4.1%)	12,138 (5.1%)	12,055 (4.7%)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나. 혼인 증가가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 계량분석[34]을 활용하여 2025년의 혼인 증가가 당해 연도의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

- 2025년 혼인 건수는 24.0만건으로 전년(22.2만건) 대비 1.8만건(8.1%)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는 23.8만명에서 25.4만명으로 1.6만명(6.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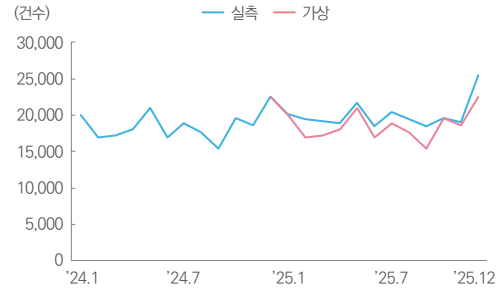
- SVAR 모형을 이용해 2025년 혼인 건수가 2024년 동월수준에 머물렀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 2025년 출생아 수는 24.6만명으로 추정됨

➲ 모형의 출생아 수는 실제 출생아 수보다 8천명 적은 수준으로 2025년 혼인 증가가 없었다면 출생아 수 증가 폭은 크게 작았을 가능성을 시사

- 2025년 출생아 수 증가(1.6만명) 중 50%는 당해연도의 혼인 증가로 설명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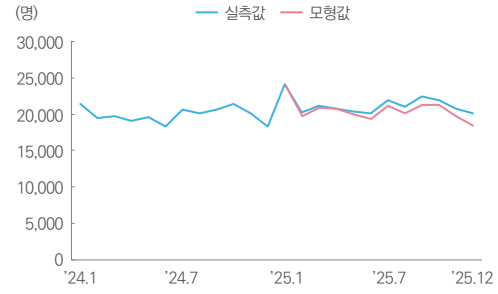
- 단, SVAR 추정결과는 혼인 충격을 식별하는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혼인 증가의 인과효과를 직접 관측한 결과는 아님
  - 고용률과 아파트 가격을 모형에 포함하더라도 정부의 저출생 관련 정책 등 모든 관련 요인을 통제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려움

그림 5 | 혼인 건수 및 가상 혼인 건수



주: 가상 시나리오는 2025년 월별 혼인 건수가 2024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림 6 | 출생아 수 실측값 및 모형 값 비교



주: 모형 값은 2025년의 혼인 건수가 2024년 수준일 경우 계산된 출생아 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 건수의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

- 최근 혼인 건수 증가가 향후 수년간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혼인과 출생의 동행 지표적 특성은 향후 출생아 수 전망에 불확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향후 혼인 건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출생아 수 증가세도 빠르게 약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어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때 향후 혼인 건수 추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

[34] 자세한 방법론은 [Box 1: 2025년 혼인 증가가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

03 혼인 반등의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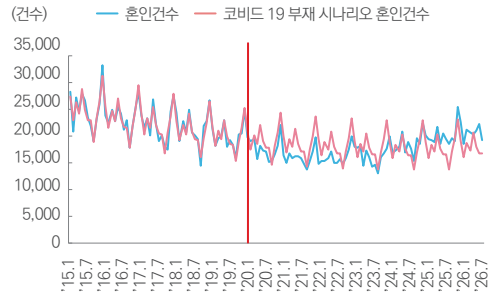
가. 코로나19 시기 혼인 감소분의 회복

➲ 최근 혼인 건수의 증가가 코로나19 시기의 지연된 혼인의 회복에 따른 것인지 점검할 필요

- 코로나19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결혼식 관련 제약 등으로 혼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당시 혼인 건수 감소는 혼인 수요 자체의 감소뿐 아니라 혼인 시점의 이연에 따른 영향도 포함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 증가의 상당 부분이 지연된 혼인의 회복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연된 혼인 수요의 회복이 마무리된 이후 혼인 건수가 다시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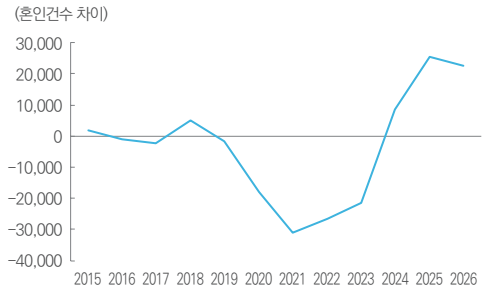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혼인 건수를 추정하고, 실제 혼인 건수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인 건수의 감소분과 회복분을 산출[35]

그림 7 | 혼인 건수 및 코로나19 부재 시나리오 혼인 건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림 8 | 혼인의 감소 및 회복



주 : 1) 혼인 건수와 코로나19 부재 시나리오의 혼인건수 차이를 연도별로 집계
2) 2026년은 8월까지의 수치를 집계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정 결과,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한 혼인 건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3년 실제 혼인 건수는 반사실적 추세 대비 약 9.7만 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해당 기간 실제 혼인 건수는 79.1만 건으로,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혼인 건수보다 약 11% 적은 수준

- 2024년부터 혼인 건수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2026년 8월까지 약 5.7만 건의 혼인 감소분이 회복된 것으로 추정

---

[35] 자세한 방법론은 [Box 2: 코로나19 이전 혼인율 추세를 이용한 혼인 감소와 회복 추정]을 참조

• 코로나19 시기에 지연된 혼인의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이연된 혼인의 회복이 혼인 증가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가 영구적인 효과를 갖는다면 혼인 건수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감소할 수 있음
  - 반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동반되었다면 높은 혼인율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나.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

➲ **인구전략위원회(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이하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점검**

• 인구전략위원회는 2024년부터 연 2회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혼인의향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현재까지 2026년 상반기 조사 결과가 공개되어 총 5회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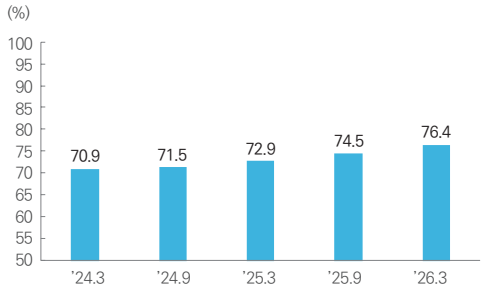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미혼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의향'을 발표
  - 연령별 인식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집단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점검

➲ **혼인 의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제 혼인·출산 적령기인 30대에서는 인식 변화가 제한적**

•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혼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모습
  -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긍정'으로 응답한 비중은 2024년 3월 70.9%에서 2026년 3월 76.4%로 상승
  -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중 '결혼의향 있음' 응답 비율도 2024년 3월 61%에서 2026년 3월 67.4%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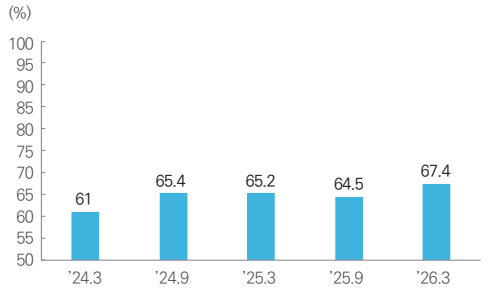
• 단, 연령별로 보면 혼인 및 출생의 중심 연령대인 30대에서는 혼인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 30대의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긍정' 응답 비율은 2024년 3월 73.5%에서 2026년 3월 73.2%로 큰 변화가 없음
  - 30대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중 '결혼의향 있음' 응답 비율도 2026년 3월 67.3%로 2024년 3월(62%)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2024년 9월(68.1%) 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림 9 |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긍정'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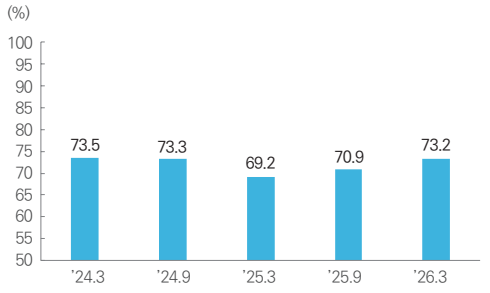
주 : '긍정' 응답은 '긍정적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를 합한 비율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10 |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중 '결혼의향 있음'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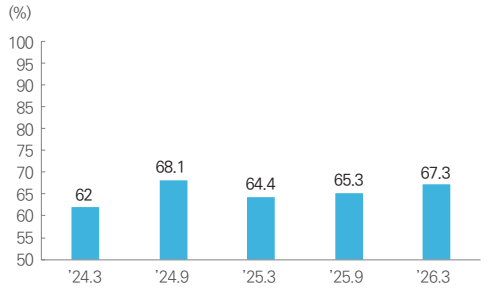
주 : '결혼의향 있음' 응답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하고싶다'를 합한 비율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11 |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30대 '긍정' 응답 비율



주 : '긍정' 응답은 '긍정적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를 합한 비율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12 |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중 30대 '결혼의향 있음'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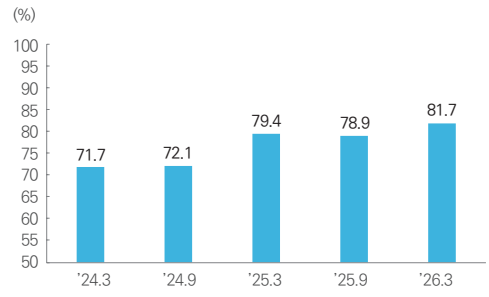
주 : '결혼의향 있음' 응답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하고싶다'를 합한 비율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은 40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남

- 40대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 변화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40대의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긍정' 응답 비율은 2026년 3월 81.7%로 2024년 3월 대비 10%p 증가
  - 40대 미혼 응답자의 '결혼의향 있음'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9.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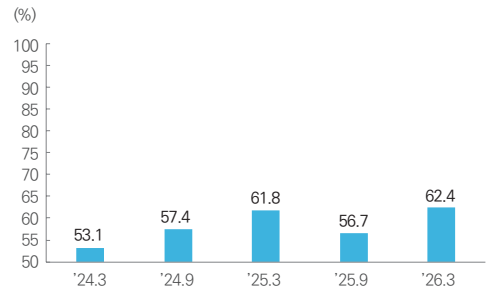
- 25~29세에서도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 25~29세의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긍정' 응답 비율은 2026년 3월 70.5%로 직전 조사인 2025년 9월(71.4%)보다는 소폭 하락했으나, 2024년 3월보다는 6.5%p 상승
  - 25~29세 미혼 응답자의 '결혼의향 있음' 비율은 2026년 3월 70.8%로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그림 13 |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40대 '긍정'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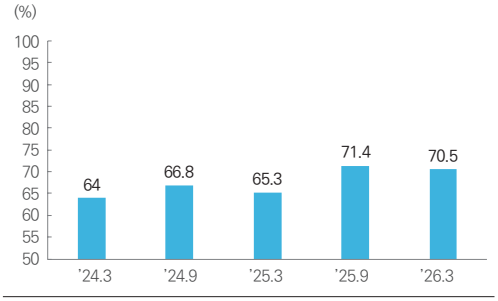
주 : '긍정' 응답은 '긍정적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를 합한 비율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14 |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중 40대 '결혼의향 있음'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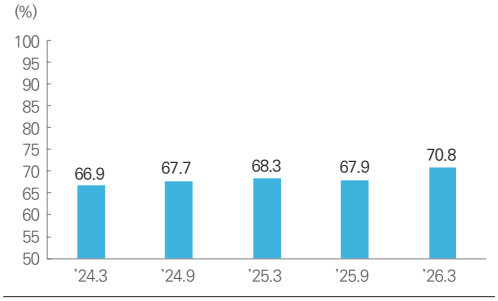
주 : '결혼의향 있음' 응답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하고싶다'를 합한 비율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15 |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25~29세 '긍정' 응답 비율



주 : '긍정' 응답은 '긍정적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를 합한 비율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16 |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중 25~29세 '결혼의향 있음' 응답 비율



주 : '결혼의향 있음' 응답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하고싶다'를 합한 비율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04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혼인과 출생의 동반 반등은 긍정적인 변화이며, 혼인 증가가 출생아 수 증가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

-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증가율 간 상관관계는 동 시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혼인이 출생의 선행지표라기보다는 동행 지표적 특성을 보임
- 2025년 혼인 건수 증가가 당해 연도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한 결과, 2025년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50%가 당해 연도의 혼인 증가로 설명되는 것으로 추정
- 혼인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태어난 출생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혼인과 출생 간 밀접한 관계가 확인되며, 향후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볼 때 혼인 건수의 변화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혼인의 회복이 최근 혼인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도 향후 혼인 증가의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

-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3년 혼인 건수는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치보다 약 9.7만 건 감소했으며, 2026년 8월까지 이 중 약 5.7만 건이 회복된 것으로 추정
- 아직 회복되지 않은 혼인 감소분이 남아 있어 당분간 혼인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이연된 혼인의 회복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혼인 증가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 혼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

➲ 연령대별 혼인 인식 변화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긍정적 인식이 실제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혼인과 출생의 중심 연령대인 30대에서는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해당 연령대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주거 및 고용 안정,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부담 완화 등 혼인을 가로막는 요인을 완화하고, 혼인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
- 20대와 40대에서는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혼인 의향이 개선되는 모습이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혼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특히 20대의 혼인 의향 개선이 실제 혼인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향후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정부는 연령대별 혼인 인식과 실제 혼인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 혼인으로 이어져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Box 1] 2025년 혼인 증가가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이용하여 혼인 증가에 따른 출생아 수의 동태적 반응을 추정

- 고용률, 아파트가격, 혼인율, 출생률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혼인 충격이 출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0~34세 결혼 적령기 청년 고용률을 활용
  -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를 활용
  - 혼인율은 혼인 건수를 15~49세 여성인구로 나눈 수치를 활용
  - 출생률은 출생아 수를 15~49세 여성인구로 나눈 수치를 활용[36]
  - 혼인 건수, 출생아 수는 인구동향조사를 이용했으며, 여성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

기초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출생아 수	204	30,838.1	8,029.0
혼인 건수	204	22,585.9	5,351.8
30~34세 고용률	204	74.6	3.1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204	90.3	8.0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 변수 간 당기적 인과관계에 대한 재귀적 식별(recursive identification)을 적용하고, 촐레츠키(Cholesky) 분해를 통해 구조적 충격을 식별
  - 변수 순서(외생→내생)는 고용률→아파트 가격지수→혼인율→출생률 순
- 분석기간은 2008년 1월~2024년 12월이며, 추정된 모형을 활용하여 2025년 혼인 경로별 출생아 수를 전망
  - $A_0 Y_t = c + \sum_{i=1}^{p} A_i Y_{t-i} + \varepsilon_t$
  - Y_t : 고용률, 아파트가격지수, 혼인율, 출생률로 구성된 벡터
  - A_0 : 변수간 당기적 상호관계를 식별하는 행렬
  - A_i : 과거 i기 각 변수의 변화가 현재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행렬
  - 모든 변수는 12개월 차분한 값을 활용

➲ 추정된 SVAR 모형을 활용하여 혼인 충격이 출생에 미치는 반응을 분석하고, 혼인 경로가 달라지는 경우의 출생아 수를 계산

[36] 출생아 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 대신 출생아 수를 15~49세 여성인구로 나눈 값을 출생률로 활용

• 2025년 혼인 건수가 2024년 동월 수준에 머물렀을 경우를 가정하여, 출생아 수 변화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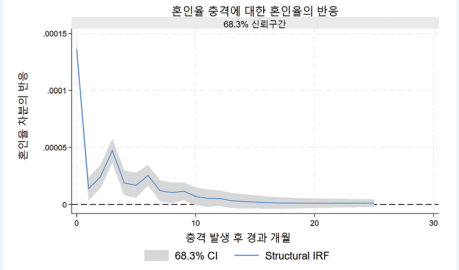
• $\Delta dM_t = \sum_{h=0}^{H} \theta_h^M \varepsilon_{t-h}^M$

- ΔdM_t : 혼인을 12개월 차분한 값의 변화
- ε_{t-h}^M : 혼인율에 발생한 구조적 충격
- θ_h^M : 혼인율 충격 발생 후 h개월이 경과했을 때 혼인율에 미치는 영향

• $\Delta dB_t = \sum_{h=0}^{H} \theta_h^B \varepsilon_{t-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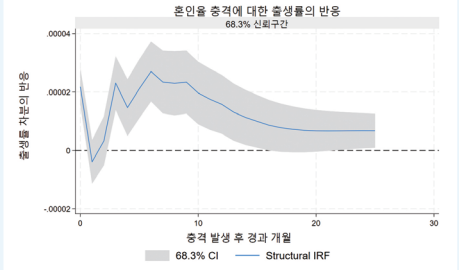
- ΔdB_t : 출생률을 12개월 차분한 값의 변화
- ε_{t-h}^M : 혼인율에 발생한 구조적 충격
- θ_h^B : 혼인율 충격 발생 후 h개월이 경과했을 때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

혼인율-혼인율 충격반응함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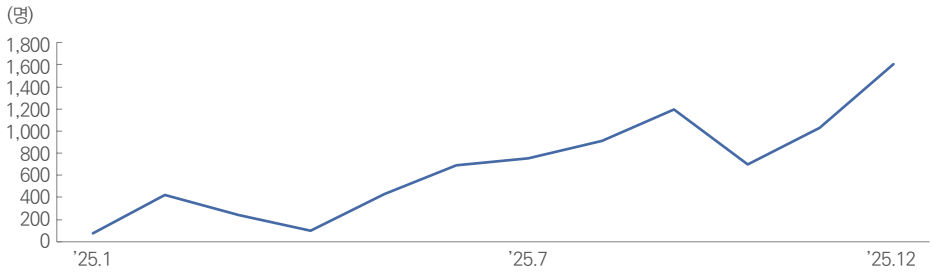
혼인율-출생률 충격반응함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분석

• 출생률의 차이에 15~49세 여성인구를 곱해 출생아 수 차이를 계산

2025년 출생아 수 실측값과 모형값 차이



주 : 2025년 월별 출생아 수와 모형으로 추정된 월별 출생아 수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분석

[Box 2] 코로나19 이전 혼인율 추세를 이용한 혼인 감소와 회복 추정

➲ 코로나19 이전 혼인율 추세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의 혼인 건수를 추정

- 혼인율은 15~49세 여성인구 대비 혼인 건수로 정의하고, 코로나19 이전 기간(2015년 1월~2019년 12월)의 혼인율 추세를 이용하여 추정
- 혼인율의 추세와 계절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추정
  - $\ln(M_t) = \alpha+\beta_1 trend_t+\beta_2 trend_t^2+\sum_{m=2}^{12}\gamma_m D_m+\varepsilon_t$
  - M_t : 혼인율, $trend_t$: 시간추세선, D_m: 월별 고정효과

➲ 코로나19 부재 시의 혼인 건수와 실제 혼인 건수를 비교함으로써 혼인의 감소와 회복을 추정

- $\widehat{M}_t^{NC} = \exp(\widehat{\ln M_t})\times P_t$를 통해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의 혼인 건수를 추정
- 누적 혼인 부족분 대비 누적 회복분의 비율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한 혼인 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평가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2026년 11월호 | 통권 제8호

발행일 2026년 11월 2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신우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8-002145-08
ISSN	3059-064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